

경제 정책 하 면

나라경제

2010
nara.kdi.re.kr

특집

2010 노사문화 선진화 원년 되려면



이달의 이슈
뿌리산업, 신3D 산업으로 거듭난다!

정책 그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년

집중토론
유로존 경제, 어디로 가나?





물 한방울, 누군가에게는 오아시스입니다.

생명의 시작인 물,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물 한 방울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희망이자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작은 물 한 방울을 절약 할 때 여러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 그리고 역사

레프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시간이 돈이다”라는 말이 은유가 아닌 현실이 돼버린 세상에서 네 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장편소설을 손에 잡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형이상학적 차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생동하는 삶의 주인공으로서 인간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면 톨스토이(1828~1910)의 「전쟁과 평화」를 읽는 일에 그 귀한 시간을 과감히 투자하라고 권하고 싶다.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이 말하듯이 역사소설은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해 모스크바까지 점령하고도 결국은 겨우 목숨을 건질 정도로 참패했던 1812년의 전쟁을 배경으로 각 계각층의 러시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러시아의 대명문인 볼콘스키 가문과 귀족이긴 하지만 지체가 약간 떨어지는 로스토프 가문이 혼혈관계로 서로 얹히면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톨스토이는 예리하고 사실적인 필치로 그려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역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음미해 보는 에필로그로 책을 마감하고 있다.

유명한 문학평론가 존 스타이너의 말을 빌리자면, 톨스토이는 솜씨와 기질로 보서는 세밀한 것을 잘 관찰하고 잡아내는 데 귀재인 '여우'였지만, 그의 바람은 그러한 일상의 집합으로 이뤄지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우직하리만큼 집요하게 파고들어 역사란 '지도자'들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총체적 표현이라는 결론을 얻는 '두더지'였다.

이 책의 매력은 읽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중·고등학생 시절 처음 읽었을 때 내 관심의 초점은 당연히 러시아 여성이 지닌 매력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과 인간 관계, 개개인의 내면세계에 관해 톨스토이를 통해 얻게 되는 인상과 통찰력은 깊이깊이 마음속에 남아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기 나름대로 음미해보게 만든다.

나타샤 로스토바와 귀족적 이상의 결정체라 볼 수 있는 안드레이 공작 사이의 사랑 이야기였다. 전쟁 장면은 건너뛰며 읽었다.

러시아사를 전공하는 대학원 학생으로 읽었을 때는 천사 같은 마음씨를 갖고 있지만 자기 정체성을 찾아 헤매는 대부호 귀족의 서자 피에르나 배움은 없지만 삶에 대한 통찰력으로 피에르의 마음을 사로잡은 농부 카라타예프, 혁혁한 공로로 가문의 영광을 지켜온 데 대한 공지와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역으로 그녀에 대한 학대에 가까운 변덕으로밖에 표현 못하는 안드레이의 아버지 볼콘스키 공작이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됐다.

얼핏 보기엔 본문과 이질적인 듯한 에필로그의 역사철학 강론이 러시아 작가 파스테르나크의 「의사 지바고」 후미에 실린 시들과 마찬가지로, 소설 본체와 유리된 것이 아니라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이었음을 깨달은 것은 중년이 넘어 다시 이 책을 읽었을 때였다.

어떤 책을 읽을 때는 재미있어도 곧 잊게 된다. 하지만 걸으며 드러나는 다양한 삶의 모습과 인간관계, 개개인의 내면세계에 관해 톨스토이를 통해 얻게 되는 인상과 통찰력은 깊이깊이 마음속에 남아 그 현장을 다시 찾아보며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기 나름대로 음미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 나의 글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1936년생. 서울대 사학과, 미 하버드대 역사학 박사. 서울대 러시아연구소 창립소장, 주핀란드·주러시아 대사,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역임. 「지식인과 역사」, 「러시아지성사 연구」, 「풍요로운 사회, 가난한 학교」, 「대화」 등의 저서가 있다.



특집

2010년 노사문화 선진화 원년 되려면

09 전임자 · 복수노조 제도 연착륙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재갑 노동부 노사정책실장

12 새로운 노사관계로 나아갈 근로시간 면제제도
오영민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서기관

14 조직의 비전과 정보부터 나누자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장

16 전임자 임금 금지, 노사관계 터닝포인트 되길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18 반성 · 변화 ... 이젠 희망이다
김규한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

20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 높여야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03 천천히 읽기
개인과 가족 그리고 역사-「전쟁과 평화」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그들은 바쁘다

52 대한민국을 웃게 하는 사람들
신경선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 사무관

55 미니 인터뷰: 김화동 FTA 국내대책본부장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경제정책해설

34 서비스업 해외진출에 3조원 지원
강미자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사무관

37 무선인터넷에 5년간 1조5천억원 투자
홍진배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

40 2015년까지 R&D서비스 전문인력 1,400명 양성
김왕근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 사무관

42 민원인 개인 정보 철저히 보호한다
서남교 행정안전부 제도평가과장

44 품격 높은 창조사회, 매력 있는 패션국가
신용식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46 사회적기업 육성, 이제는 지자체가 책임진다
마성균 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

48 서민을 찾아가는 미소금융
신진창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장





세계는 지금

- 22** OECD 혁신전략,
성장 촉진과 사회적 문제 해결 주도
김봉수 주OECD대표부 참사관
- 25** 농업·비농산물 협상에 발목 잡힌
DDA 서비스 협상
윤상욱 주제네바대표부 1등 서기관

정책 그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년

- 72** 함께하는 효도, 한걸 가까워진 선진국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 73** “노인을 위한 보험인 동시에 가족을 위한 보험이죠”
김일열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도입TF팀 서기관
- 74** “몸 아픈 어르신 마음까지 챙겨요”
김솔나 나라경제 인턴기자
- 75** ‘저보험료·저급여’ 방식 바뀌어야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연중 기획

작지만 강한 기업

- 78** 탄탄한 기술력으로 세계 무선모뎀 시장 선점
김태성 씨모텍 대표
- 80** ‘모바일 엘도라도’ 시대 열렸다
김동석 전자신문 모바일팀장

집중토론

28 유로존 경제, 어디로 가나?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훈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50 경제생활정보

기금 소진돼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김산철 국민연금공단 홍보실장

이달의 이슈

뿌리산업, 新3D산업으로 거듭난다!

- 58** 뿌리산업, ‘제조업 선도하는 명품 성장산업’ 된다
이승우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장
- 60** 뿌리산업을 중소기업형 전략산업으로 육성
신기룡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장
- 62** 기술개발·기술지원 선순환체계 갖춰야
김원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예교공정연구부장
- 64** “도금기술 없이 첨단산업 한발짝도 못 움직여요”
황재익 (주)제이미크론 사장
- 66** 스위스에서 한 수 배우자
박일근 한국일보 산업부 차장
- 67** 대한민국 ‘철강장인’ 키운다
합덕제철고등학교
- 68** 세계 최고의 기술력 갖춰야
이수완 선문대 전자재료공학과 교수



칼럼

56 나라 밖 경제

급변하는 중국의 노동 환경
조현주 KDI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원

70 김 대리의 환경노트

그린은 플러스, 탄소는 마이너스
유복환 환경부 감사관

76 클래식 카페

동백꽃 아가씨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장일범 음악평론가

81 마음 들여다보기

한국인 정체성의 뒷모습 '체념한 자포형'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82 통계로 본 나라경제

'베이비부머 O씨' 일대기
박병선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사무관

84 생애설계와 자산관리

가장 큰 투자엔진은 자신의 직업
강창희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장

86 세미나

KDI, 「OECD 한국경제보고서」 세미나
김솔나 나라경제 인턴기자

88 그 길을 걸었다 - 갯벌(강화도 동막 해변, 전남 신안 증도)

생태계의 자궁 속을 걷다
이용한 작가

92 독자만족도 조사

『나라경제』 독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94 시평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 걱정할 때 아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나라경제는 KDI와 14개 경제부처가 함께 만듭니다.

나라경제

2010. 7 [제21권 7호 통권 236호]

발행 편집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편집인	현오식 KDI 원장 박철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문형표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편집주간	심재학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정보실장 대행
편집위원	기획재정부 윤성욱 정책관리담당관 교육과학기술부 박필환 과학기술정책과장 외교통상부 최철규 통상기획홍보관 행정안전부 조봉업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조현래 기획행정관리담당관 농림수산식품부 최명철 홍보담당관 지식경제부 전용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노형욱 정책기획관 환경부 김영훈 정책총괄과장 노동부 박종필 기획재정담당관 국토해양부 김경옥 기획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조경식 기획재정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박세봉 경쟁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김인 정책홍보팀장
편집간사	김보열 기획재정부 정책관리담당관실
편집장 취재·편집기자	이재열 유성임, 안선경, 권기대, 표초희, 김솔나
배포	김경숙, 김정철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ISSN 1227-8033 07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9
전화	02-958-4656, 4654
팩스	02-3295-0744
홈페이지	http://nara.kdi.re.kr
e-mail	nara@kdi.re.kr
발행일	2010년 6월 30일(매월 말일 발행) 제21권 7호 (통권 236호)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 (문화 라 04859호)
기사 문의	02-958-4634
광고 문의	02-958-4614
구독료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2-958-4312 권당 3,000원 연간 30,000원
제작지원·인쇄	성우에드컴(주)
사진	이래스튜디오

*『나라경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 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함께 준비한 우리 둘 다 국민연금 받아요 ”

성년이 된 국민연금!
꾸준히 함께하여 노후 준비의 기본을 마련했습니다.

20년 가입시

노령연금수급자

▶ 1인당 월평균 **77만원** (2010년 4월 현재)

▶ **2,360,000명** (2010년 4월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임병상, 오정순님 부부

보건복지부

 **NPS** 국민연금공단

2010년 노사문화 선진화 원년 되려면

올 1월호 『나라경제』는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만나 2010년을 ‘노사문화 선진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해 들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힘을 합쳐야 기업 경쟁력도, 국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뜻에서였지요. 불법적인 투쟁은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될 뿐, 정부는 법과 원칙, 자율과 공정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노사는 상생을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나라경제』는 노·사·민·정 각각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재갑
노동부
노사정책실장
jaeklee@molab.go.kr

전임자 · 복수노조 제도 연착륙 위해 최선 다할 것

“**노**사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인식은 무엇이나?”,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노사정책실장직을 맡은 후 주변에서 많이 받는 질문들이다.

여기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하다. 정부는 ‘노동과 경영은 기업의 양 수레바퀴’라는 인식을 갖고 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수레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수레가 잘 움직이듯, ‘노동과 경영’이라는 두 축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상생 · 협력해야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노동과 경영은 기업의 양 수레바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도 분명하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조 활동,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서로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최대한 보장하고 충분히 존중’ 하겠으나, ‘불법 · 부당한 노사 활동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 하겠다는 것이다.

〈표 1〉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합법 · 합리적 활동	불법 · 부당한 행위
· 보호 및 보장 · 자율적 대화를 통한 해결 존중	· 엄정대응 · 타협하지 않고 책임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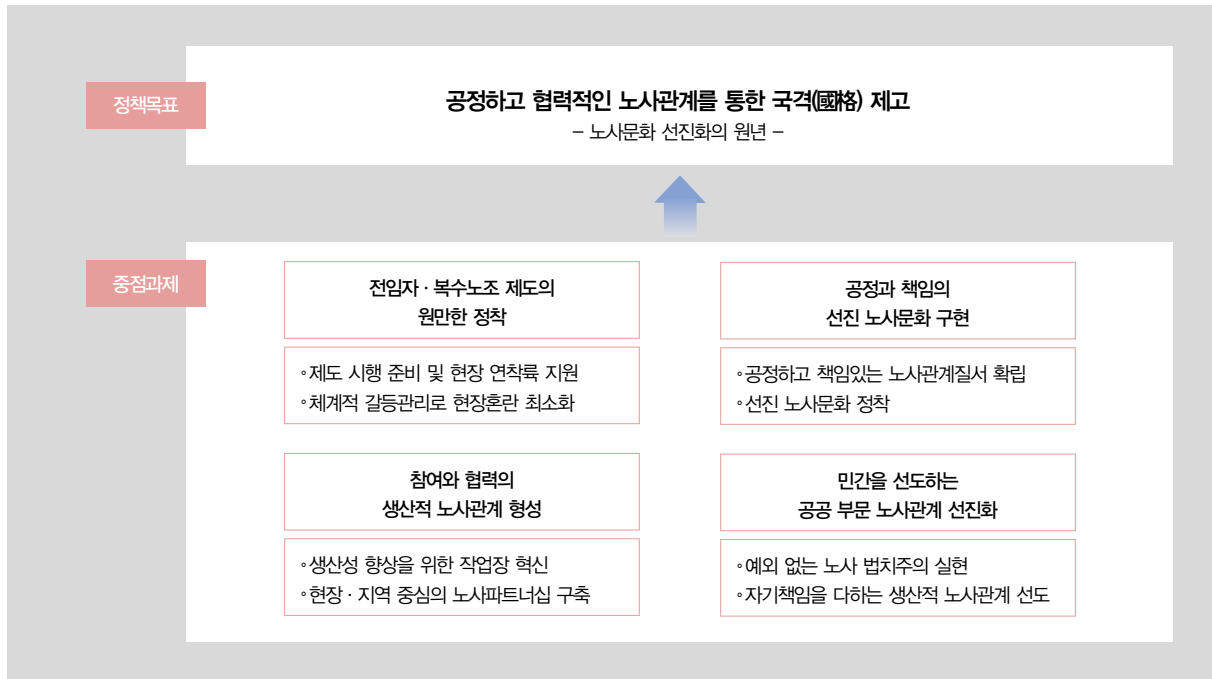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지난 5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전에는 노사 문제를 빨리 조용하게 해결하려 했지만, 지금은 다소 고통이 따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대로 근원적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지난해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나 철도공사 노조 파업 사태에서 정부가 보여준 대응은 정부의 분명하고 확고한 기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008년 2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된 노사관계 정책을 펴왔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협력이 더해지면서 노사관계는 점차 안정돼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면서 우리 노사관계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았다. 전임자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기적 갈등이 잠재해 있는데다 경기 회복기를 맞아 노동계의 자기 몫 찾기와 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등이 상충해 서로 대립할 여지가 있기 때



문이었다.

각종 단체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필자 주: 경총에서 내놓은 ‘2010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서는 (300인 이상 기업 198개소) 전년 대비 ▲불안 88% ▲바스 10% ▲안정 2%로 나타났고, 전경련이 201개 회원사 인사·노무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불안 72.6% ▲안정 27.4%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지향하는 ‘법과 원칙’의 기조 아래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상반기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과 생산성 향상을 다짐하는 ‘노사협력선언’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하고, 노사분규, 특히 불법분규 건수도 감소세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또한 노사문화 선진화의 토대가 될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에 대해서도 지난 5월 11일 노사정이

〈표 2〉 노사관계 변화 추이

노사협력선언(5월)	648건(2009년) → 697건(2010년), 7.6% 증가
분규건수(5월)	2004년 77건 → 2006년 35건 → 2008년 23건 → 2009년 33건 → 2010년 16건
불법 분규건수(5월)	2004년 10건 → 2006년 10건 → 2008년 5건 → 2009년 4건 → 2010년 3건

합의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연착륙도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2010년이 노사문화 선진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임자·복수노조 제도의 연착륙, 공정하고 책임 있는 선진 노사문화의 구현,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 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우선 올해 초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용자의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한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제도」도 시행된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사용자와의 교섭·협의를,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법에 정한 활동을 하거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경우 한도시간 내에서 유급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많은 진통 끝에 합의되고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당사자인 노사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지난 12월 4일 노사정 합의와 노조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제도 관련 매뉴얼과 설명서를 배포하는 등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기업의 단체협약 체결 현황과 시행 상황을 파악해 법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행태를 보일 경우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한편,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창구단일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노사의 준비 사항을 지도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그간 불법적인 정치파업, 무노동·무임금 원칙 파기, 정당한 노조활동 침해 등 후진적인 행태들은 노사문화 선진화의 걸림돌이 돼왔다. 정부는 지난해 1,744건에 이르는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의 인식 변화와 자율적인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 사용자는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해야 하며, 노조도 인사·경영권을 존중하고 기업의 한 주체로서 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공정하고 책임 있는 선진 노사문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노사문화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사업장 점거, 타사업장 원정 투쟁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법을 준수하는 정당한 쟁의 질서가 확립되도록 힘쓸 것이다. 부당한 교섭 거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침해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해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노사 상생의 파트너십 발전 노력 필요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적인 노사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정부는 노사 파트너십 증진,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한 작업장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통합 진단 컨설팅 등 각종 컨설팅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2010년이 노사문화 선진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임자·복수노조 제도의 정착, 공정하고 책임 있는 선진 노사문화 구현,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 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등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인적 기반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수사업장을 발굴해 인증·포상을 수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TV·온라인·신문 등 다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도 진행 중이다.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안정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된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 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공 부문 노사관계 선진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노사의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법하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공공 부문 노사관계 진단 및 평가체계 구축, 작업장 혁신모델 개발 등을 지원해 공공 부문에 생산적 노사관계의 모범이 되도록 할 것이다.

2010년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해다. 선진 노사관계 제도가 시행되고 공공 부문에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면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적 노사문화가 지역 및 산업현장 곳곳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의 토대가 구축되고 국가의 품격이 높아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선진 노사문화는 노사의 자발적 노력에서 시작된다. 노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경쟁과 책임’, ‘자율과 공정’의 원칙을 지키면서 상생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는 노사의 이런 노력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다. 서로를 옥죄었던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노사가 서로를 소중한 동반자로 인정하며 상생·협력한다면 올해가 ‘노사문화 선진화의 원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영민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서기관
oyeongmin@molab.go.kr

새로운 노사관계로 나아갈 근로시간 면제제도



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6일 여의도 노사정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3년간 해묵었던 과제 중 하나인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원 금지가 드디어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되며, 예외적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등 일정한 근로시간면제 대상인 노조 활동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

건전한 노조활동 보장,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목적

노조 활동비용은 노조의 자주성·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섭 상대방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활동을 임금의 손실 없이 허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근로시간면제제도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했다. 노동계는 전임자 급여지원을 중단할 경우 노조의 존립이 위협받는다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이 같은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시행 유예 기간 중 노사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하도록 유도하려 했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는 계속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 개선하면서도 노사 공동의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이 모아져 2009년 12월 4일 ‘노사정합의’를 도출했다. ‘12·4 노사정합의’에서 2010년 7월 1일부터 사용자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일정한 활동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절한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며, 구체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2010년 1월 1일 노조법이

개정됐으며, 2월 26일 발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5월 14일 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를 함으로써 제도의 틀을 갖췄다. 고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표>와 같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노·사·공익 공동으로 추진한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결정됐다. 또 ‘12·4 노사정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규모 노조의 합리적인 노조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노조는 가급적 자체 재원으로 노조 활동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정립될 수 있게끔 마련된 것이다.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해 규정한 근로자는 근로시

노조 활동비용은 노조의 자주성·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합리적인 범위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활동을 임금의 손실 없이 허용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 현장의 노사는 우선 해당 사업장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의 전임자 제도에서도 전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한 취지에서 근로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대상자를 확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거나 승인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조합원 규모*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50명 미만	최대 1,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50~99명	최대 2,000시간 이내	
100~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이상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000~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2012년 6월 30일까지: 28,000시간+매 3,000명마다 2,000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	
	2012년 7월 1일 이후: 최대 36,000시간 이내	

주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

** 부칙(최초로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특례)

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할 수 있다.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제도 정착 유도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입장과와 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불법행위나 부당행위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일선 현장에서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제도의 취지에 맞춰 노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노사 교육, 노사 지도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전임자 급여를 지원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법을 위반한 상황에 대해선 먼저 자율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지만,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제도의 정착은 정부 노력만으로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 노사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도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노사관계가 선진화되길 바라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도 노사관계 선진화에 힘을 모으고 제도 정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장
ywnam@kef.or.kr

조직의 비전과 정보부터 나누자

최 근 한국은행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8%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의 주요 기관들도 2010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 성장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노사관계 불안요인도 많아 선불리 경기 회복을 예단하기는 힘들다. 특히 우리 노사관계는 매년 ‘법과 원칙’보다는 ‘힘’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경제회복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도 노동계는 7월 개정 노조법(타임오프제 포함) 시행에 맞춰 중앙 단위에서 법·제도 개선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단위에서는 단체교섭을 활용해 높은 임금인상 요구,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문제를 중점 제기하고 있어 하반기 노사관계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더 이상 대립적 노사관계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안정적 일자리 제공은 요원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LG전자는 21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민주노총을 탈퇴한 KT노조는 올해를 ‘HOST’(Harmony; 화합, Originality; 창조, Sharing; 나눔, Transparency; 투명) 운동의 원년으로 삼고 사측과 함께



지난 3월 5일 서초동 KT 올레캠퍼스에서 열린 ‘올레 KT 창조적 신노사문화 공동선언’ 행사에서 이석재 KT회장장과 김구현 KT노조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선진 노사문화 구축에 나서고 있는 점은 주의 깊게 볼 만하다.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발전적 노사관계, 경쟁력 유지의 필요충분조건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대전제는 ‘노사 간 상호 신뢰’다. 노사분규의 1차 원인이 커뮤니케이션 부재에 따른 상호 정보 부족과 이에 따른 신뢰 결여에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사 간 다양한 경로의 정보교류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생산현장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일상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첫째, 사용자는 기업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조직

내 비전과 정보를 근로자와 공유해야 한다. 투명·공개 경영원칙을 확립하고 사내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노조나 일반근로자들의 기업경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근로의 장인 기업을 사랑하고 기업발전이 근로자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용자는 노사갈등의 사전적 조정자로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나서야 한다. 다양한 근로자들의 애사심 고취 활동(일일임원제, 지역본사 활동, 소집단 활동 등)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충을 파악하는 기회를 갖고 이를 해소함으로써 노사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셋째, 생산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상시적 교육·홍보 노력과 더불어 생산활동 중심의 노무관리가 필요하다. 사용자는 '생산성·효율성 제고는 근로조건 향상과 고용안정의 전제'라는 선순환 구도를 정립해야 한다. 근로자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그 성과에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기업의 경영목표를 노사가 함께 설정하고 그 성과에 따라 공정한 룰에 의한 배분을 하게 된다면 '분배의 뿔'을 둘러싼 대립적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다.

넷째, 사용자 스스로 법과 원칙을 준수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노사 간 '룰'을 지킬 수 있는 풍토가 선행되어야만이 협력적 노사관계도 가능하다. 과거 일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기업사정을 도외시한 과도한 요구나 기업사정과 무관한 정치적 의제와 관련한 투쟁에 대해 대중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근로자의 기대심리를 고조시켜 불법투쟁이 악순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사 간 법 준수 의식 우선돼야

2010년은 개정 노조법 시행 첫해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노사 간 법 준수 의식이 요청되는 시기다. 사용자들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라는 법 정신을 준수해야 하며, 과거처럼 임시방편이나 미봉책으로 노사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대전제는 '노사 간 상호신뢰'다. 노사분규의 1차 원인은 커뮤니케이션 부재에 따른 상호 정보부족과 이에 따른 신뢰결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경로의 정보교류 체계 구축이 필수다. 기업은 생산현장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일상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발전적 노사관계의 구체적 사례로 앞서서도 언급했던 LG전자의 '가치창조적 노경(勞經)관계'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과거 LG전자는 1987년 10월, 1989년 36일 동안 지속된 파업으로 인해 6천억원이란 매출 손실로 회사존립 자체마저 위협당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LG전자는 노사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먼저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경영정보를 근로자와 신속하게 공유했다. 또한 최고 경영층이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내가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했다. '직원 만족 없이 고객 만족 없다'는 모토 아래 직원들의 고충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사용자의 철저한 노력은 1990년 이후 2010년까지 노사 간 임금교섭 무분규 타결, 2010년 USR(Union Social Responsibility;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현장 발표 등 책임 있는 노동운동과 노경관계 구축이라는 결실을 맺게 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사용자들이 지향해야 할 역할과 목표가 무엇인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0년 하반기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노사관계 10년 대계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기다. 노사정 간 자기혁신을 통해 개정 노조법의 안정적 정착,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정신에 부합하게 불법을 차단하고 합리적 노동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노동계도 구시대적 강령과 전투적 노동운동의 관행에서 탈피하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용자의 노력이다. 사용자 스스로 자주적인 노무관리 역량을 배양하고, 근로자의 신뢰와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올해는 발전적 노사관계의 원년이자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san3691@naver.com

전임자 임금 금지, 노사관계 터닝포인트 되길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지난 5월 10일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타임오프제의 합리적 운영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3자 회담을 갖자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정부와 경영계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노사관계의 큰 변화를 가져올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고 내년 7월부터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삭제되어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엄밀히 말하자면 회사를 하지 않고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급여지원이 금지되고, 노사 간에 합의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노조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노조가 급여를 지급하는 전임자를 별도로 두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노조전임자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해서도 안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정확히 말하면 그동안 개별 기업 단위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노동

조합의 설립에 대한 마지막 남은 제한조항이 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사업장 단위의 교섭을 위해서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신설됐다. 노조설립은 자유로 하되 교섭창구는 규제함으로써 단결권 보장 효과를 떨어뜨리고 교섭질서 확보라는 현실적인 필요를 반영한 셈이다.

전임자 급여 부담되지만 자주성 높일 것

이번의 노사관계 변화는 사실 13년 전에 예고됐던 상황이다. 1997년 3월에 이미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이 제정됐었다. 그러나 그동안 노사정 간 현실적 이해관계에 의해 13년간 적용이 유예돼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계에 수차례

노동법 개정이 있어 왔지만 이번과 같이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의 기초 체계·질서에 충격을 준 변화는 흔치 않다. 1980년 기업별 노조 강제에 이어 두 번째 사건일 것이다.

이러한 제도변화가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임자 숫자와 무관하게 급여를 회사가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합활동을 늘려 오던 관행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이며, 사업장 단위 노조 간 경쟁이 나타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노조전임자는 조합활동의 근간이다. 이에 대한 회사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소규모 노조의 조합활동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근로시간면제를 받아 조합활동을 하는 것 또한 과거 노조전임자 관행에 비해 매우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노사관계가 악화돼 대립과 갈등이 극대화되면 회사측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시간관리라는 명목으로 전임자의 일거수 일투족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노사관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또 근로시간면제한도의 부여 범위가 사업장 단위이므로 초기업 단위 노조의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업장 밖으로 밀려나 노사관계의 범위는 사업장 단위로 국한될 것이다. 이는 복수노조 허용 시 교섭창구 단일화 범위를 사업장 단위로 국한한 것과 맞물려 기업별 노사관계의 울타리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 초기업 단위 노조가 근로조건 결정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에서 배제되고 근로시간면제를 사업장 단위로 운용하게 되면 노사관계는 기업 차원으로 쪼그라들고 기업 간 격차나 기업 이기주의가 극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초기업 단위 노조까지 참여하는 교섭질서 필요

한편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노조가 부담하면 노조의 자주성이 높아지고 조합원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돼 노사 간 대등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없지는 않다. 교섭창구가 단일화돼도 노조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과반수노조 또는 다수노조 지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에 대한 노조의 민주적 절차와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은 노사의 몫이다. 노조가 위축돼

전임자임금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사용자에게 대한 노조의 의존성을 떨치고 조합원과 밀착한 대변자로서의 노조를 만들고, 이를 인정하는 사용자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노사관계로 간다면 상생의 노사관계는 이뤄질 것이다.



쌍용차 노사는 '타임오프제'를 개정 노동법에 따라 시행하고 법적 근거가 사라진 월차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상안을 지난 5월 19일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쌍용차 노조 전임자 수는 기존 3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다.

사용자 우위의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기업별 노사관계의 심화로 기업 간, 근로자 간 격차가 벌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갈 것인가? 노사가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초기업 단위 노조까지 참여하는 교섭질서를 구축해 기업 간, 근로자 간 격차를 줄이고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로 갈 것인가?

노사관계는 행위주체인 노사의 의도와 이에 따른 행동의 상호작용 결과물이다. 전임자임금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사용자에게 대한 노조의 의존성을 떨치고 조합원과 밀착한 대변자로서의 노조를 만들고, 이를 인정하는 사용자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노사관계로 간다면 상생의 노사관계는 이루어질 것이다. 전임자임금 금지와 복수노조를 계기로 노조를 약화시키고 이번 기회에 이에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다면 노사관계 협력은 고사하고 대립과 갈등의 전근대적 노사관계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 쓰면 보약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독약이 된다.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가 노사관계 안정과 선진화로 가는 길목에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며, 특히 사용자들이 노조에 대한 포용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박재**

반성 · 변화... 이젠 희망이다

김규한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

조립라인에 의자가 없어졌다. 휴게실 주변에 떨어져 있던 담배꽂초도 없어졌다.

쌍용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77일간의 파업과 대치는 잊혀진 지 오래. 노동자와 사용자는 오로지 생존을 위해 살을 깎는 고통을 이겨냈다. 업무 재개 8개월 만에 7천대 이상의 차량이 생산됐고, 올해 1분기 판매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노사 화합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김규한 쌍용차 노조위원장(41세)을 만났다.



지난해 8월 노사 타협을 이룬 후 10월 노조위원장을 맡았다. 쌍용차 조기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는데 요즘 근황은 어떤가?

올해 첫 사업인 임단협이 잘 마무리됐다. 쌍용차 노조 설립 22년 만에 무쟁의로 진행된 일이다. 79% 찬성을 얻었다. 그만큼 조합원도 현 노조를 믿고 지지한다는 뜻이다. 많은 분들이 쌍용차를 걱정하신 걸로 안다. 정말 쌍용차가 달라질까, 일어설 수 있을까 의심도 하셨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일이다. 꼭 지켜야 한다.

변화된 노사문화, 익숙한 말 같지만 와 닿지는 않는다.

예전에는 노조가 일하지 않는다, 투쟁만 한다는 인식이 은연중에 있었다. 이젠 새롭게 도전하는 노조가 되려 한다. 어떤 노총에도 속하지 않고 조합원과 회사를 우선 생각하는 노조가 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해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탈퇴하면서 단일노조를 이뤘다. 쌍용차 내부의 자립심을 키우고 지역 내에서 쌍용차의 위신을 올리는 것부터 해야 할 때다.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만들고 노조가 변하면 회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우리가 될 거다. 이젠 노조가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고,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또 직접 판매에도 나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새희망노동연대 같은 제3의 노동운동을 지향하겠다는 건가?

그렇진 않다. 사회적 참여 부분은 동의하지만 거기에 속할 생각은 없다. 정치색을 배제하겠다는 거다. 기존의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볼모로 하면서 정치적 색깔을 띠지 않았다. 우리가 노동운동을 하면서 처음에 배웠던 희생과 봉사는 잊어버렸다. 조합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노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공장은 다 가동되고 있나?

주야로 돌던 수준은 아니지만 주간만 일하면서도 생산량을 80% 이상 달성하고 있으니 되레 저비용 고효율 구조가 됐다. 쌍용차가 혼자 서려면 7천300~400대선을 생산해야 하는데 3개월 연속 해냈다. 지난해 대비 100%

이상 생산성이 향상됐다. 자가호흡은 할 정도가 된 거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마지막 뒷심이 필요하다. 올 하반기 신차출시가 바로 그전데 산업은행에서 자금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 애가 탄다. 임금반납 250%, 복지중단 등 하라는 구조조정은 모두 했다. 우리가 살아야겠기에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처절하게 반성했다. 이젠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다. 인력도, 기술도 다 준비돼 있다. 품질도 노조가 책임지겠다.

조합원들의 사기는 어떤가?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회사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몸부림치는 중이다. 라인이 거의 중단 없이 100% 돌아간다. 전에는 근로자들이 힘들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라인을 세웠다. 그럼 순차적으로 전 라인이 선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라인을 세우길 원하지 않는다. 시간이 돈이다. 30분이면 차량이 10대, 3억원이 손해라는 걸 모두가 알기에 라인 중간중간에 있던 의자도 치워버렸다. 힘은 들지만 그래야 나와 우리 회사가 산다는 걸 안 거다. 애사심은 1천% 높아진 것 같다. 요새는 누가 말 안 해도 일찍 출근해서 청소하고 몸을 푼다.

무급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8월이면 복직해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쌍용차는 환자로 말하면 병상에서 수술을 마치고 침대 위에서 회복 중인 상태다. 솔직히 해고된 동료나 무급휴직 중인 직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여력이 없다. 내가 아픈데 다른 사람을 간호할 것인가, 내가 다 나은 후에 돌볼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은 시간을 갖고 인내해야 할 때인 것 같다. 기다리게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회사를 정상궤도에 올리는 게 먼저다.

조합원들과는 자주 만나나? 사용자측과 관계는 어떤가?

취임 후 매주 월요일 출근 때 노사 간 인사하기를 하고 있다. 처음엔 피하던 직원들도 이젠 익숙하게 인사한다. 또 현장실습을 위해 사장단, 간부들과 매주 화요일 만나고 공장을 돈다. 조합원들을 하도 자주 만나러 다니니까 이젠 그만 오라고 할 정도다. 사장단도 권위적인 관리자 모습을 버리고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적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이젠 그런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합원도 사장단도 빨리 회사를 살리라고 응원해준다. 고맙다.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시작된다. 민간기업 중에는 처음 이를 수용한 사례라고 하던데 어떻게 합의를 이뤘나?



지난 6월 15일 이유일 쌍용자동차 공동관리인(앞 왼쪽)과 수베쓰프(Shvetsov) 러시아 솔레스차 회장(포함 필로스 호텔)에서 장기 수출 협력서에 사인하고 있다.

조합 간부가 80명 정도였는데 위원장 취임 이후 45명으로 줄여놨었다. 법령이 고시되면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조합원들과 그간 대화를 많이 했다. 주유나 정비 같은 수익사업을 통해서 30~35명 선에 맞춰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아직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다. 노조 위원장이기 이전에 아버이고, 남편인데...

솔직히 집에도 계속 못가고 미안하다. 그렇지만 좀 기다려 달라고 했다. 지금의 미안함은 앞으로 갚을 기회가 있지만 쌍용차가 잘되느냐 아니냐는 1, 2년 내에 결판난다. 사내 커플이던 아내는 지난 사건 때 희망퇴직을 했다. 아내 덕분에 남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한다(하하).

노사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1960년대 경제개발시대에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많이 억압했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노동자가 사용자를 억누르는 분위기였다. 서로 눈치보고 군림하려던 시대를 지나고 보니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지 않나. 이젠 노사가 힘을 합쳐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려면 노동조합도 회사도 투명해야 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노조 슬로건이 반성, 변화, 희망이다. 지난 77일 간의 파업에 대해 반성했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변화했다. 쌍용차를 많이 사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는 게 우리에게 희망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신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쌍용차가 될 것이다. 기사님도 나중에 우리 차 좀 사 달라(웃음).

이영
장기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cwlee@kili.re.kr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 높여야



지난 5월 6일 울산시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보험회사의 봉사단원들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사랑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도를 바꾸는 일이다. 20년 전 어느 방송에서 유명한 인사가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설명하면서 말한 사례가 있다. 도로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나면 한국 사람은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워놓고 큰소리로 싸워서 제압하려 하고 미국 사람은 차를 옆으로 치워놓고 합리적으로 풀어가는데 문화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그런가? 요사이 접촉사고가 나면 우리 국민들도 미국 사람들처럼 대응하

고 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문화를 변화시키는 기초는 제도의 변화이다. 20년 전 우리에게서는 보험이나 행정제도가 성숙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미성숙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도의 발전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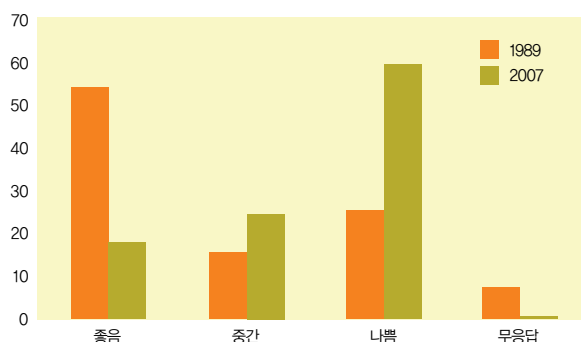
제도와 함께 윤리 강화돼야 선진화 가능해

최근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뀌었다. 13년 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받아 왔고 노사갈등의 근본 배경이 됐던 전임자 임금제도와 복수노조 관련 교섭제도를 개선했다. 이제는 노사 간 그리고 노노 간에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가지게 됐고 불필요하게 싸울 이유가 줄었다. 물론 남은 과제가 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문화가 바로 바뀌지 않는 것은 주체들의 의식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가 공정하다면 주체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윤리가 강화돼야 한다. 이것이 선진 문화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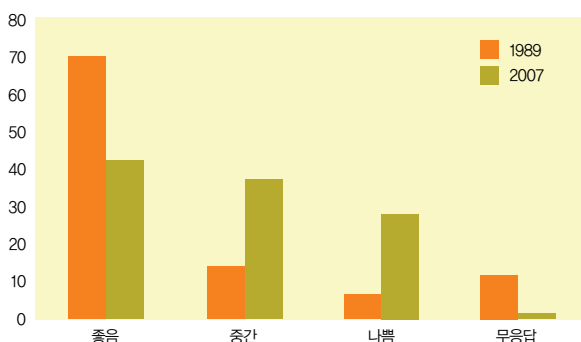
노동운동은 역사적으로 기본적 권리의 획득을 목표로 발전해 왔다. 사용자와 정부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얻는 과정이 1987년 이후 20여년간 우리 노동운동의 기본 특징이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일방적으로 권리의 향유주체만 될 수는 없다. 모든 국민들의 삶의 터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현대사회일수록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노동운동은 자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불평등의 완화와 정의의 구현에 합목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은 성숙되지 못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1989년과 2007년 두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노동조합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효

〈그림 1〉 노동조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그림 2〉 노동조합이 사회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효과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국민의식조사 결과(2008년)

과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각기 53.3%에서 16.0% 그리고 69.7%에서 40.2%로 감소했다(〈그림 1〉, 〈그림 2〉 참조). 이는 우리의 노동운동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사회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사회적 책임의 결여 현상을 보여준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자면 반드시 사용자들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용자들의 고용주적 책임의식이 약화돼온 것은 배경을 떠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특히 직접고용의 축소는 원인이나 다양하지만 결국 우리 대기업들의 사회적 역할이 저하돼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이런 문제는 우리 기업들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책임의 약화는 세계화 경쟁에서 선진국 대기업들의 공통적 행위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규범과 제도가 나타났고 국제적 지침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사회적 책임 지침인 ISO 26000이 올해 말 공포될 전망이다.

ISO 26000은 기업 이외에 정부·노조·시민단체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이다. 그런데 ISO 26000 작업에는 기업만이 아니고 정부·노조·소비자대표·NGO·기타 전문가들이 이른바 이해당사자 자격으로 동등하게 참여해 왔다.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종합하다 보면 결국 주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ISO 26000에서 지배구조, 환경, 인권, 노동관행, 공정행위, 소비자보호, 지역사회 및 사회개발공헌 이렇게 7개 영역은 빠질 수 없는 핵심이슈다. 아울러 여기서는

노사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한 제도와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주체들이다. 또 제도를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윤리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선진화의 완성 단계는 사회책임의 윤리가 각 주체들의 의식에 내면화되는 시점일 것이다.

대기업 당사자만이 아니고 하청관계나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까지도 반영한다.

사회적 책임 요구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만약 ISO 26000이 확산되고 국제적 영향력이 확장된다면 이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기업들(특히, 대기업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대기업 노사관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책임 패러다임에 입각한 새로운 노사관계는 노사 당사자들의 이익을 넘어서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체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아울러 노조조직 자체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기 때문에 ISO 26000은 노조조직의 변화를 추동하는 촉진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 상근직원들에 대한 고용주적 책임과 재정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방만한 상근조직을 정예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동을 할 수 있는 인력들로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노사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에게 공정한 제도와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주체들이다.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윤리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선진화의 완성 단계는 사회책임의 윤리가 각 주체들의 의식에 내면화되는 시점일 것이다. 

OECD 혁신전략, 성장 촉진과 사회적 문제 해결 주도

혁신은 개도국과 선진국 가릴 것 없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서부터 지식 창출 및 적용·확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문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미래 발전 및 사회적·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원동력을 제공한다.



지식경제부와 OECD가 공동 주최한 '한-OECD 녹색성장 워크숍'이 지난 3월 4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켄 워릭 OECD 국장이 참석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OECD는 혁신전략을 2011년까지 진행될 OECD 녹색성장전략과 OECD 사회발전 측정 프로젝트와 연계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최 근 OECD는 혁신전략(OECD Innovation Strategy)을 발표했다. 여기서 OECD는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전 지구적·사회적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혁신'이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전까지 혁신에 관한 논의는 슘페터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주창한 기술혁신론에서부터 GE의 잭 웰치에 이르기까지 민간기업의 혁신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혁신 활동은 기업의 흥망과 가치를 결정

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공공 부문의 혁신 활동에 관한 논의는 제한적으로 진행돼 왔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공공 부문 혁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민간 부문의 활동을 원용해 적용하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참여정부가 수행한 5년간의 혁신 활동의 평가가 기획부처보다 집행부처에서 높게 나타난 배경이기도 하고 이러한 활동이 문화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5월 2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포럼 2010'에서는 녹색성장의 핵심 키워드인 혁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은 앙겔 구리아 OECD 사무총장

과거 공공 부문 혁신논의 상대적으로 미흡

OECD는 오늘날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 2008~2009년의 경제 침체로 인해 잠재 생산성의 성장률은 감소했고, 실업률과 공공 부채는 크게 증가했다. 많은 국가들이 인구수의 정체 또는 감소와 함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실물 자본(physical capital)에 대한 노동력 투입 및 투자수익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거나 획기적으로 개선된 제품, 과정 및 방법의 도입을 의미하는 혁신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요소로 인식된다.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에 의해 유도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기후 변화, 보건, 에너지 및 식량 안보, 청정수 확보 등 여타 다양한 국제적·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정치적 압력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 공통의 문제이기에 전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각국의 공조와 수요·공급 측면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 혁신은 이러한 문제들을 적은 비용으로 적시에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예를 들어, 혁신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OECD는 현실 경제에서 혁신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 부문의 정책결정자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07년부터 혁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3년간의 작업에서 OECD 30개 회원국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혁신의 속성을 분석하고 경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정책원칙들을 도출했다. OECD의 경쟁·조세·교육·과학기술·산업·재정·무역·환경·지역개발·통계·보건 등을 다루는 각종 위원회가 수평적 논의를 수행했다. 이는 상호 연관된 분야 간의 공동 논의를 촉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접근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기반으로 활용됐다. 특히 이 기간 중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각 회원국의 경기부양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OECD 혁신전략은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인식 아래 혁신 정책의 입안 과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전략은 정부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5개의 우선 영역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5개 영역은 사람들의 혁신역량 증진, 기업 혁신활동 촉진, 지식의 창출과 활용, 지구·사회적 문제 해결, 혁신 거버넌스와 측정방식의 개선을 포함한다. 이들 전략은 혁신을 통한 경제 회복, 장기적으로는 혁신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일관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OECD 혁신전략은 시장역할을 포함해 공급 측면의 투입과 수요 측면 사이의 보다 긴밀한 연계(match)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

서 혁신의 변화 동향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OECD는 다음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보다 강력하고 깨끗하며 공정한 성장(stronger, cleaner and fairer growth)을 유도하는 데 있어 혁신 정책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집중

둘째, 혁신 과정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및 다양한 혁신 주체들을 포함한다는 인식 아래 과학과 기술을 넘어서 비기술 분야의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 확대

셋째, 효과적인 공공 연구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충분히 제공하고 연구 기관의 거버넌스를 증진하며 R&D 자금 지원 수단 간의 일관성을 강화

넷째,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분야 종사자들의 창의성 및 혁신 참여도를 높이고, 혁신 결과로부터 보다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니즈(needs)를 반영한 교육·훈련 정책 추진

다섯째, 신생 기업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들 기업 역할에 대한 관심 증대

여섯째, 효율적인 지식 흐름을 촉진하고 네트워크 및 시장의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지식의 창출·순환·확산을 도모하는 메커니즘 마련

일곱째, 지구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비용과 위험의 공동 부담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국제적 협력 거버넌스 체제 및 방안 수립

여덟째, 혁신을 정부 정책의 핵심 부분으로서 최고위층의 강력한 리더십 기반 아래 추구함으로써 정책 일관성 보장

아홉째, 광범위하고 긴밀히 연결된 혁신의 개념 및 혁신이 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틀 수립

‘정책 핸드북’ 등으로 각국 혁신전략 지원

OECD 혁신전략은 5개의 주요 보고서로 이뤄져 있다. 앞서 말한 정책원칙의 세부적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정책 보고서, 혁신의 속성과 추세, 증거 기반의 분야별 촉진 전략과 정책 시사점을 포함하는 종합보고서, 혁신 활동의 국가 간 비교, 혁신 과정의 개발 및 실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집, 혁신 원칙을 실행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종합한 정책핸드북 등이다. 또한 이러한 종합보고서

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사례분석을 포함한 일련의 분야별 상세 보고서가 있다. 기업 혁신, 미시경제적 관점의 혁신, 세계 혁신, 지식시장 및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인적자원, 기업가 정신, 수요기반 혁신 등이 독립된 보고서로 발간됐다. 이 보고서들은 OECD의 혁신전략 포털사이트(www.oecd.org/innovation/strategy)에서 찾아볼 수 있다.

OECD는 개별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OECD의 혁신전략을 활용해 국가적·세계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도울 계획이다. 혁신전략을 시행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앞으로 모니터링, 동료 간 학습 및 경험과 우수 정책관행의 공유·교환을 통해 더 큰 혜택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개월 안에 OECD는 각국이 혁신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과 지침을 제공하는 정책 핸드북(Policy Handbook)을 작성해 제공할 예정이다.

혁신은 미래 발전 및 사회적·세계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데 강한 원동력을 제공한다. 개도국과 선진국 가릴 것 없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서부터 지식 창출 및 적용·확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OECD는 혁신전략을 2011년까지 진행될 OECD 녹색성장전략과 OECD 사회발전 측정 프로젝트와 연계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OECD 혁신전략의 개발 과정에서 정책 입안자들과 이해 관계자들과의 토론과 협의가 매우 유용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도 일하는 방식의 혁신, 국가 및 지역 혁신체제 구축 등에서 우리가 축적한 경험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고 이들의 소중한 경험을 채택하는 등 OECD의 혁신전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나라경제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주OECD대표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봉수
주OECD대표부 참사관
kbs@mest.go.kr

농업·비농산물 협상에 발목 잡힌 DDA 서비스 협상

농업·비농산물(NAMA) 협상이 정체돼 있는 상황인데다가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서비스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개도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DDA 협상에서 획기적 시장개방이 합의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서비스 산업의 역사는 인류의 경제활동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지만, 서비스 교역에 대한 개념과 다자간 규범이 나타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상품교역에 관한 다자간 규범이 1947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로부터 출발했다면, 서비스교역 다자간 규범은 1994년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인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로부터 출발해 상품과 서비스 교역규범은 약 50년의 시차를 두고 있다.

이렇듯 서비스 교역규범이 뒤늦게 출범한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1970년대까지도 서비스 교역이란 주로 국내에서만 이뤄지거나 혹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간에만 가능한 것으로 간주됐다. GATT 회원국들은 통상 서비스 거래를 국내적 또는 쌍무적 규범으로 규율했다. 둘째, 서비스 교역이 이뤄지는 4가지 방식(mode 1: 서비스 수출자와 수입자가 각각 자국에 존재하면서 이뤄지는 서비스 거래로 국제 컨설팅, 국제보험, 설계·디자인 제공 등이 있음. mode 2: 서비스 수입자가 생산국으로 이동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예로 관광업이 있음. mode 3: 서비스 생산자가 외국에 법인을 설립, 현지에서 법인의 형태로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방식. mode 4: 간호사·조산원과 같이 개인이 특정국으로 이주, 현지에서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즉 인력의 이동에 대한 개념과 규율체제가 확립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UR 협상 당시만 해도 서

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일부 선진국에 한정돼 있었다. 개도국들이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였다. 우여곡절 끝에 1993년 12월 GATS 출범에 합의가 이뤄졌다.

선진-개도국 간 서비스 개방 의견차 여전

오늘날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서도 서비스협상을 바라보는 선진-개도국 간 이러한 입장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선진국은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이 농업 및 비농산물(NAMA) 협상과 더불어 DDA 3대 시장개방 협상의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개도국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개방을 요구한다.

서비스 시장은 통신·금융·건설·유통·에너지·환경·교육·법률·물류 등등 분야와 규모가 나날이 세분화되고 커지고 있다. 과거 요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던 서비스 산업은 이제 제조업의 중간재화인 동시에 경제개발을 목표로 하는 개도국 경제의 인프라 산업으로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이렇다 할 서비스 수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개도국은 협상에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개도국은 2005년 WTO 홍콩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농업, NAMA 협상의 득실을 따진 후 서비스 시장개방 수준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위 '홍콩 시퀀스'(sequence)라 불리는

WTO 각료선언은 현재까지도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은 선진국이 자국 서비스 업계의 해외이윤 획득만을 추구한 채 도하 ‘개발’ 라운드의 취지를 망각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개도국이 선진국을 상대로 수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서비스인 간호사·조무사·조선원 등 인력시장(mode 4) 개방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도국은 UR 이후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이 더 서비스 시장에 적극적이었다고 하면서 DDA 협상에서 선진국이 이러한 비대칭적 개방을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비스 협상에 대한 개도국의 취약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긴급세이프가드(ESM; Emergency Safeguard Mechanism) 제도 제안이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ASEAN 국가들은 상품교역에서의 긴급세이프가드 제도와 같이 서비스 수입이 예측하지 못한 수준으로 급증할 경우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해당 서비스 수입을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ESM 없이는 서비스 시장개방은 없다’고 으름장을 놓곤 하는데, 구체적으로 ASEAN 국가들의 영세한 소매상·은행·건설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여겨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서비스 협상에 ‘찬물’

선진-개도국 간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 금융위기는 서비스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투기적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서비스 시장의 개방보다는 건전성 심사 등 규제 권한의 강화가 보다 설득력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제금융 자체도 도마에 올랐다. 망해야 할 기업을 살리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세계 서비스 산업의 경쟁구도를 왜곡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금융위기와 농업, NAMA 협상의 부진으로 인해 서비스 협상 성과는 최근 2년간 극히 부진하다. 2008년 7월 제네바 소규모 각료회의 기간 중 개최됐던 각료급 시그널링 회의(Service signaling conference)에서 전세계 서비스 업

계가 잠시 장밋빛 기대를 했었을 수도 있다. 당시 회의에서 30여개 주요 서비스 교역국 각료들이 나뉘어 의미있고 진취적인 시장개방을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농업, NAMA 협상이 자국에 최대한 유리하게 타결됐을 경우를 전제로 한 추상적인 개방선언이었을 뿐, 구속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사실 시그널링 회의 자체도 협상의 진전 정도를 계량화할 수 없는 서비스 협상의 특수성 때문에 개최됐다고 할 수 있다. 농업, NAMA의 경우 관세감축 공식을 통해 수출증가와 무역이익을 산술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8년간 이어져 온 DDA 서비스 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서비스 업계는 DDA 협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해외 서비스 수출기회가 어느 정도인지 낙관할 수 없었다. 시그널링 회의는 미국과 EU가 자국 서비스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한 정치적 이벤트였다. 그러나 오히려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을 가로막는 장애가 됐다. 개도국은 시그널링 회의에서 자국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장개방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이는 서비스 시장접근의 최종단계(end game)에 해당되는 것으로 더 이상의 추가협상이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5위 서비스 수출국으로 연간 수출규모는 740억달러, 전세계 서비스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적지 않은 규모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 그간 DDA 서비스 협상에서 선진국 진영의 일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개방을 추구해왔다. 특히 해운·건설·통신·금융·유통을 5대 인프라 서비스 산업으로 선정, 주요 서비스 수출대상국의 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EU·인도·ASEAN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 FTA를 타결한 우리로서는 DDA 협상의 긴장도가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FTA 협상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익을 다자적 차원에서 관철해 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서비스 시장은 상품보다 ‘선점’ 효과가 몇 갑절 크다. 이미 FTA를 통해 특정국가 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이 DDA를 통해 추가로 개방된 관련 업종 사업을 개시할 경우, FTA를 맺지 못한 여타국 서비스 기업보다

영업 노하우나 인지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서비스 시장개방이 전무했던 개도국 서비스 시장을 DDA를 통해 일정 수준까지 개방해 놓음으로써,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미래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진입기회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DDA 서비스 협상이 농업, NAMA 협상의 볼모로서 협상의 공백기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하나, 그렇다고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 서비스 교역은 상품교역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1980년에 전세계 서비스 수출은 약 4천억달러였으나, 2008년에는 3조7천억달러로, 30년간 9배 성장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8.6%에 해당한다. 이는 과거 서비스 교역이 소수 국가 간에만 이뤄졌으나 개도국으로 참여폭이 확대돼 감을 의미한다. 아울러 상품과 달리 서비스 교역은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불황기에도 감소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전체 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기 침체의 타격을 덜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들은 DDA 협상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세계 서비스 교역시장 증가 추세가 본격화되고, 어지간한 외부적 충격으로도 그 추세를 꺾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세계은행과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연구에 따른 실증연구 결과다. 대다수의 개도국이 UR 양허보다 훨씬 큰 폭의 서비스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자국 경제개발의 필요 때문에 UR 양허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보다 고차원의 서비스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따라서 자발적 추가 개방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자발



지난해 11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적 개방, 즉 ‘현행 개방 수준의 동결’도 DDA 서비스 협상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며, 그 경제적 가치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요컨대 농업, NAMA 협상이 정체돼 있는 상황인데다가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서비스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개도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DDA 협상에서 획기적 시장개방을 얻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지난 50년간의 관세인하 라운드를 통해 세계평균 관세율이 한 자리 숫자에 달한 상품과 비교해 볼 때, 서비스는 추가 자유화 정도와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막대하다. 비록 협상은 정지돼 있으나 대다수의 회원국이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 편의에 따라 일부 서비스 업종을 자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서비스 협상이 장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차지할 위치를 가늠케 해준다고 하겠다. 박원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주제네바대표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윤상욱
주제네바대표부 1등 서기관
quellen@naver.com

유로존 붕괴 가능성 희박 ... 강화될 EU 금융감독 주시해야

때 _ 2010년 6월 9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곳 _ 명동 은행연합회관

진행자 _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참석자 _ 최훈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준호 2009년 말 그리스에서 시작된 남유럽 재정위기가 헝가리 등 동유럽으로 번지면서, 환율·주가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에서 외국계 자금이 6조원 가까이 순유출되는 등 여파가 예상보다 크다. 현재 유럽경제 동향은 어떤가?

최훈 유럽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미국·일본·아시아 등 여타 국가에 비해 느리게 회복하는 모습이다. 3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됐지만 전기 대비 0.2% 내외의 소폭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유럽증시는 계속 부진한 모습이며, 유로화 가치는 2008년 10월 이후 달러 대비



최훈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저치로 하락했다. 구제금융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과 유로존(Eurozone: 유럽연합의 단일 화폐인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해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통칭하는 말로,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총 16개국이 가입돼 있다.) 외해 우려 등으로 유로화 선호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수출은 유로화 약세 및 전 세계 교역량 증대로 1분기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함준호 EU(European Union: 유럽의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연합) 국가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 보나?

강유덕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EU의 만성적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EU 회원국들은 총 2천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또한 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자동안정화 장치가 발달한 유럽 국가의 경우, 경기침체 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강하다. 경기부양과 자동안정화 장치로 지난해와 올해 EU가 지출한 재정은 EU GDP의 5%에 해당하는 6천억유로 정도다. 여기에 금융안정을 위한 채권보증 등 재정적자로 기록되지 않는 지원책까지 포함하면 GDP 대

비 16.5%에 달한다. 이러니 재정수지 악화는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함준호 그리스·포르투갈 등 과다채무국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 보인다.

강유덕 그리스는 지난해 10월 총선으로 정권이 교체됐는데, 구정부는 그동안 재정적자 수준을 사실과 달리 GDP 대비 3.7%라고 발표해 왔다. 그런데 신정부가 재정적자 수준이 12.7%에 이를 것이라고 정정발표하자 시장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는 지하경제 규모가 크며 재정시스템도 낙후돼 있고 공공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건전한 재정운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제조업 부문이 취약하고 관광에 차중돼 있는 산업구조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을 제일 먼저 받은 상황이다. 한편 포르투갈·스페인의 경우 그리스와 함께 정상수지 적자가 10년 동안 지속돼 왔고,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10%를 넘는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률도 낮아 대외채무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유로화 도입 이후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자 많은 자금이 스페인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결국 건설 부문이 스페인의 성장동력이 됐는데, 2002~2006년 고용의 1/3이 건설에서 창출될 정도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거품이 붕괴돼 타격을 받았다.

함준호 그렇다면 이들 국가의 부채위험에 대한 우려가 유럽 전반으로 확산된 이유는 무엇인가?

최훈 유로지역은 단일통화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어느 한 회원국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다른 회원국으로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5개국 대외채무의 74.6%에 해당하는 2조9천억달러가 유럽 내 차입이다. 유럽국가 간 차입 의존도가 높아 문제국가들에 대한 자금 회수가 급격히 이뤄지면 유동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는데, 최근 헝가리 등 동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설도 제기되고 있다. 동유럽 국가는 유럽계 은행, 특히 남유럽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동유럽 은행 차입금 중 유럽계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91%에 달하고, 특히 그리스 은행에서 차입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그리스 은행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축소)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

함준호 금융 불안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EU와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훈 과장

“
우리와 남유럽은 유럽발
위기의 원인이나 대응
여력에서 질적으로 다르다.
과도한 낙관은 경계해야
하지만 지나친 비관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위기도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IMF는 지난 5월 10일 7,500억유로(약 1조달러)에 달하는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6월 7일에는 유로존 16개국 재무장관들이 룩셈부르크에서 4,400억유로 규모의 재정안정기금 마련에 최종 합의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지원 계획이 충분하다고 보나?

강유덕: 지원책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지난 3월 25일인데 당시는 지원 규모가 450억유로였다. 이것이 부족하다고 평가돼 1,100억유로까지 늘어났다. 앞으로 3년 동안 그리스로 돌아오는 만기 국채상환 금액이 1,100억유로보다 작기 때문에 액수만 본다면 그리스 채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는 지원책은 될 수 있다. 또한 5월 10일 발표된 5천억유로 규모의 유럽안정 메커니즘과 IMF로부터 조달받을 수 있는 약 2,500억유로의 지원액까지 합할 경우 PIIGS 국가들이 국채를 상환하는 데는 충분한 액수라고 보인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채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재정긴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가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장이 의심하고 있다.

최훈: 그리스는 재정적자를 2014년까지 GDP 대비 3%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공무원 임금 삭감 등 300억유로 규모의 재정긴축안을 발표했다. 포르투갈은 2013년까지 법인세 인상, 공공투자지출 감축 등 110억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내놔고, 영국은 IT·건설 부문의 예산 축소 등을 통해 올해 62조5천억파운드(약 11조원)의 세출을 절감해 2016년까지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민간 경기 회복세가 확대돼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럽 내 지역불균형 문제가 시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령 위기관리 체제에 대응한 유럽통화기금(EMF; European Monetary Fund) 설립,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 기능 확대, 공동 유로채권 발행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재정규율의 엄격한 시행 또는 재정통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세금을 거둬 재정위기에 직면한 지방정부에 재정을 이전하는 방식의 유럽통합 정부 설립 방안도 있다. 회원국의 국가부도를 허용하되, 질서 있는 방식을 통해 채무재조정을 하는 체제 도입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함준호: 대규모 지원책이 발표됐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 등 취약 국가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유덕: 만약 채무재조정에 들어간다면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법과 채무 자체를 깎아주는 방법이 있다. 두 방법 모두 채권국 간 강력한 합의가 필요하다. 만약 채무재조정을 한다 해도 해당 국가의 정치권에서 이 단어를 선불리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더라도 발표 시기를 최대한 늦출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앞으로 6개월이 채무재조정을 할 것인지, 지원책으로 매듭을 지을지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함준호: 10여년 전 아시아 외환위기 당사를 생각해보자.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 외화유동성 문제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했고 경상수지 흑자 창출을 위한 혹독한 구조조정도 이뤄졌다. 그러나 그리스는 환율조정과 대외 부문을 통한

“
EU는 금융권의
미시·거시 건전성을
담당하는 EU 자체의
감독기구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리스본 조약을 개정해
유럽통화기금을 조성할
가능성도 크다.”



강유덕 연구위원

구조조정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만이 해결 방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지 우려하고 있다. 국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그리스 재정위기의 해결이 지연될 경우 그리스를 강제로 유로존에서 탈퇴시키기도 곤란할 것이다.

강유덕: 그리스 사태 이후 EU는 각 국가의 거버넌스를 통제할 수 있는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협약 불이행 시 제재조치가 미약했다. 벌금을 낸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고, 경고 조치만 30번 발효됐을 뿐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은 SGP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EU 각료이사회의 정책결정 의결권을 박탈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함준호: 유로화로 인한 통화 통합의 이익이 유로존 내 선진국에 비해 PIIGS 국가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배분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통화 통합으로 역내 무역의 불균형은 더 심화됐고 상대적으로 독일·프랑스 등 강대국은 흑자를 누려왔다. 통화 통합의 효과를 역내 국가들 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최훈: 회원국들이 환율메커니즘을 통해 경제의 펀더멘탈 변화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었던 것이 유로 체제 내 불균형 문제의 본질이다. PIIGS 국가들의 경우 유로화 사용은 차입비용을 줄여 줬지만 역내 교역에서는 10여년간의 만성적 경상적자로 나타났다. 반면, 독일·프랑스 등 북유럽은 역내 교역에서 지속적 흑자를 누리면서 불균형을 심화시켜 왔다. 이 문제는 유로존 체제가 출범할 때부터 지적된 것이지만 남유럽 사태가 촉발되면서 유로화의 미래와 관련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은 EU 체제의 핵심이고 ‘하나의 유럽’(One Europe)을 지탱하는 가장 구체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유로존 체제 붕괴와 같은 극단적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우선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체제안정 노력을 기울이면서 유럽통화기금 설립, 재정통합, 회원국 채무재조정 제도 도입과 같이 보다 근본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함준호: 두 분 모두 유로화가 자체적인 내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임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유로화 체제, 즉 유로존이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 같다. 그리스 등 위기 국가가 부분적으로 유로화 체제에서 퇴출당할 가능성도

낮다고 보는가?

강유덕: 그리스의 퇴출 가능성은 그리스 차원과 EU 차원으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그리스 화폐가치는 절반 가까이 평가절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GDP도 절반이 될 것이고 유로화 표시채무는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 돼 채무 상황이 더욱 요원해진다. 그리스 정치인 중에 EU 탈퇴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편 EU를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유럽 통합의 거대한 틀에서 볼 때도 그리스 등 일부 국가의 유로존 퇴출 내지는 탈퇴를 논의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속된 60년 유럽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함준호: 그렇다면 결국 내부적인 문제를 안고 가면서 장

“
유럽 재정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유럽 내부의 합의가
쉽지 않을 뿐더러,
통화 통합에 내재된
구조적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함준호 교수

기적인 치유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우리는 그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최훈: 먼저 우리가 남유럽에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對 PIIGS익스포저(exposure, 위험노출액)는 24억9천만달러로 전체 익스스포저의 4.7%에 불과하다. 다만 남유럽 사태의 영향이 확대돼 유럽은행의 해외자금 투자 회수가 본격화된다면 외화유동성 부문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수출이나 산업 측면에서 보면 우리와 PIIGS 국가의 직접교역은 2.4%로, 활발하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을 통한 간접 수출도 3.5%에 불과하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재정위기의 확산이 유럽권 전역으로 번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IT·자동차·철강 등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럽의 침체로 중국의 수출이 줄어든다면 중국을 경유한 국내 수출에도 시차를 두고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것이다. 다만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이냐는 결국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강유덕: 그리스가 EU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는 1.5%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리스를 비롯한 PIIGS 국가의 익스포저가 적기 때문에 직접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금융시장을 통한 간접 충격을 생각해 보면, 외국계 은행이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외채의 절반 정도를 유럽계 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계 은행의 외채 80% 이상을 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 순으로 갖고 있다. 그런데 이 4개 국가는 정확하게 그리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외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결국 그리스 위기는 이 4개국 은행을 통해 우리나라로 파급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U 차원의 경기침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 EU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무역 흑자만 놓고 본다면 첫 번째다. 올 1~4월의 수출 추이를 보면 중국·미국·일본 등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지만 EU는 8.5%에 그쳤다. EU의 경기침체와 유로화 약세가 지금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함준호: 실질적으로 유럽계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은행들이 국내에 투자한 규모가 총 2,300억달러로 상당히 큰 규모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외환유동성 부문이 취약하다. 위기가 더욱 확산되거나 지속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무엇인가?

최훈: 2008년 위기에서도 보았듯이 정부는 위기가 일차적으로 외화 자금시장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고 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리스 사태가 시작된 시점부터 관계 부처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의 모니터링 체계가 이미 가동됐다. 단기외채 축소 노력도 꾸준히 기울여 왔다. 외환보유고도 2,700억달러 이상 쌓아 두고 있다. 또 금융기관의 단기외채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고 자본유출입

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와 남유럽은 유럽발 위기의 원인이나 대응여력에서 질적으로 다르다. 과도한 낙관은 경계해야 하지만 지나친 비관도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적절한 정책대응과 빠른 회복을 통해 그렇지 못한 나라들과 차별화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위기도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강유덕: 이번 위기 후 유럽 각국은 유럽통화기금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이번 구제금융안은 'EU 회원국이 천재지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EU 차원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리스본 조약 122조 2항에 근거한 것인데, 무리하게 유권 해석한 경향이 있다. 앞으로 이 조항이 일부 개정되면서 유럽통화기금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EU 금융권의 미시·거시 건전성을 담당하는 EU 자체의 감독기구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지만, 이를 대폭 강화해 상설기관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가 제안한 것으로, 영국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설득노력을 거쳐 현재 유럽의회의 심의절차를 밟고 있다. 가장 최근 이슈는 은행세 도입이다. 각 국가별로 실시한 것을 EU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다. 현재 EU 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합의가 될 경우 이를 G20의 정식 의제로 요청하겠다는 것이 EU 주요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금융감독 강화에 촉각을 세우는 유럽의 움직임을 우리나라도 눈여겨봐야 한다.

함준호: 오늘의 논의를 종합하면, 유럽의 재정위기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럽 내부의 정치적 합의가 쉽지 않을 뿐더러, 통화 통합에 내재된 구조적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럽계 은행의 신용 불안 등 유사시에 대비해 취약 부문인 외환유동성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유럽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 등 실물경제 영향도 보다 유연한 거시정책의 운용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 

정리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34 서비스업 해외진출에 3조원 지원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

37 무선인터넷에 5년간 1조5천억원 투자

'Smart Mobile Korea Vision 2010' 수립
방송통신위원회

40 2015년까지 R&D서비스 전문인력 1,400명 양성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계획
교육과학기술부

42 민원인 개인 정보 철저히 보호한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시 사전동의·열람청구제 시행
행정안전부

44 품격 높은 창조사회, 매력 있는 패션국가

패션문화 지원 중기계획 '패션코리아 2015'
문화체육관광부

46 사회적기업 육성, 이제는 지자체가 책임진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노동부

48 서민을 찾아가는 미소금융

미소금융 소액대출 확대
금융위원회

서비스업 해외진출에 3조원 지원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지난 6월 3일 지식경제부와 KOTRA는 서울 영곡동 KOTRA 본사에서 자회사 인턴 해외 파견 출범식을 갖고 103명의 청년 인턴과 100개의 인턴 고용기업을 발표했다.

최 근 WTO 협상 및 각국 간 FTA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시장 개방이 가속화돼 전세계 서비스수출과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출과 해외투자도 증가 추세이나 서비스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5.1%로 전세계 평균과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

약한 수준이다.

이처럼 해외진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은 내수지향적인 서비스업의 특성상 해외진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대외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해외인지도도 미약했기 때문이다. 수출지원 제도도 제조업 위주로 설계돼 서비스기업이 이용하기에 제한적이고 정부 차원의

전략이 없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번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부진한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해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 위한 가이드북 마련

우선, 제조업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정비했다. '지역별·국가별 해외진출 전략지도'와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상세 가이드북'을 제작해 진출지역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외 진출 경험이 부족한 서비스기업이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문제로 애로를 겪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OTRA의 서비스업 해외진출 지원체계도 대폭 보강한다. 해외진출을 준비 중인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체계화된 현지 정보제공, 투자절차 상담 등 종합적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현지진출 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KOTRA 해외 무역관을 통해 거래파트너 물색, 마케팅 지원, 수출계약 체결 지원 등 사전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지사 등이 부족한 중소 서비스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KOTRA의 '해외지사화사업'에 서비스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사화사업 참가비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WTO·FTA 협상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통·금융·통신·건설·해운 등 5대 중점서비스 분야의 해외시장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제조업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정비했다. '지역별·국가별 해외진출 전략지도'와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상세 가이드북'을 제작해 진출지역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해 해외진출 지원의 효과성도 제고할 것이다. 서비스수출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제도화된 지 얼마되지 않아 지원규모가 미미했다. 2013년까지 수출입은행의 여신을 3,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에 지원되는 문화수출보험과 서비스종합보험을 각각 1,200억원, 2조5천억원으로 확대하려 한다. 현재는 영화·드라마·게임 등만 문화수출보험 지원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출판·CG 분야에도 문화수출보험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국의 콘텐츠 관련 기업과 공동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해 완성보증 지원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해외기업과 공동투자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완성보증을 적용해 취 대규모 콘텐츠 제작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 중 의료·관광·콘텐츠 등 해외진출 유망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지원한



현재는 영화·게임 등만 문화수출보험 지원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출판·CG 분야에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3D 다큐멘터리 영화 '한반도의 매머드'의 한 장면

다. 아울러 해외인지도가 미약한 서비스 중소기업 브랜드의 해외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원과 1대 1 비즈매칭 상담회 개최 등을 지원해 해외 네트워크 활용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다.

유럽·북미 해외취업 확대

마지막으로, 국내 서비스 전문인력의 해외취업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는 해외 구인의뢰 대비 국내 구직인력의 해외취업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취업 국가도 중국·일본 등 아시아 일부국가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해외취업률을 높이고 해외취업 국가를 다양화하기 위해 국내외 민간 헤드헌팅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북미 등으로도 해외 인력 수요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취업을 위한 국내외 사전연수 기관을

〈표〉 총수출 대비 서비스수출 비중(2008년)

(단위: %)

전세계 평균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
19.4	29.9	38.2	16.6	21.4	15.1

시설·장비 등이 우수한 대형 교육기관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현재는 중국·일본 등 4개국에 대해서만 해외 취업 후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UAE·카타르·미국 등에 대해서도 해외취업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술자력이 외국에서도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돼 서비스 전문인력이 활발하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자격 분야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술 자격 상호인정 방안'을 수립해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확대를 위한 협상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 제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해왔다. 서비스산업도 세계시장 개척을 통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발전을 거듭해야 할 때다. 이번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을 계기로 우리 서비스업의 시장이 협소한 국내에서 전세제로 확대됨으로써, 다양한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수지 개선과 고급인력의

일자리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함께 추진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해외진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강미자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사무관
keynesian2@mosf.go.kr

이것이 궁금하다!

KOTRA의 해외지사화 사업이란?

KOTRA 해외 비즈니스센터가 수출 기업의 해외 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 시장조사, 수출거래선 발굴, 거래선 관리 및 업무 연락, 거래 성사에 이르기까지 해외판로 개척을 1대1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되나?

참가하고 싶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해외무역관이 시장성을 검토한 후 결정한다.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 진행되며 사업참가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어떤 지원을 하나?

해외수출 성약(成約), 에이전트 발굴, 시장 조사 등 기업 요청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형태로 이뤄진다. 지난 2000년 7월 처음 시행된 이후 많은 중소기업의 호응을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콘텐츠 완성보증제란 무엇인가?

제작 초기 단계부터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보증, 융자하고 판매 이후 수익금으로 상환하는 제도다.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9년 9월부터 시

행됐다. 영화·게임 등 콘텐츠 기업은 흥행을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고 투자 위험이 높아 다른 산업에 비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는 더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데 금융기관의 보증, 융자가 소극적일 수 있다.

이번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으로 달라진 점은?

그간 해외 기업과 공동 투자한 프로젝트의 경우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 사례가 전혀 없었다. 이번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으로 해외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도 지원 가능하도록 법규를 개정했으며 완성보증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흥행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 법인인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지원할 예정이고, 흥행 실패 시 콘텐츠 기업이나 투자·제작자 등은 대출 상환 의무가 면제되고 SPC에만 책임이 귀속되는 '대출금 상환소구권 면제'를 적용한다. 물론 대출 심사 때 작품성·흥행성은 물론이고 메이저급 배급사의 참여, 전문 창업투자사의 투자 등 최소한의 요건이 설정돼 있다.

무선인터넷에 5년간 1조5천억원 투자

‘Smart Mobile Korea Vision 2010’ 수립



지난 6월 9일 서울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모바일 앱개발자 자원센터인 '에코노베이션 제1센터' 개관식이 열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KT 이석재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센터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애플·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국내 스마트 모바일 시장은 주요국 대비 1~2년 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새로운 스마트 모바일 환경의 건전한 생태계 형성, 신규 고용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 경제·사회 체질 개선을 위해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무선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코리아 IT펀드’, 무선인터넷 기업에 집중 투입

우선, 스마트 모바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을 구성해 위치정보 보호, 모바일 뱅킹·결제, 게임사전심의 등 규제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모바일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700억원 규모의 'Korea IT 펀드'를 생산적 활용 분야, 고도성장 분야, 신규 비즈모델 기획 등 3대 핵심 분야의 무선인터넷 기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무선인터넷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전략 수립, 중소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등 상생협력기반도 마련할 것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스마트 앱 개발 지원센터'를 구축해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웹 응용서비스 개

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대학과 연계해 지역거점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미래 시장성장 잠재력이 큰 모바일 광고 분야에서 위치기반 서비스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신유형 모바일 광고 분야를 육성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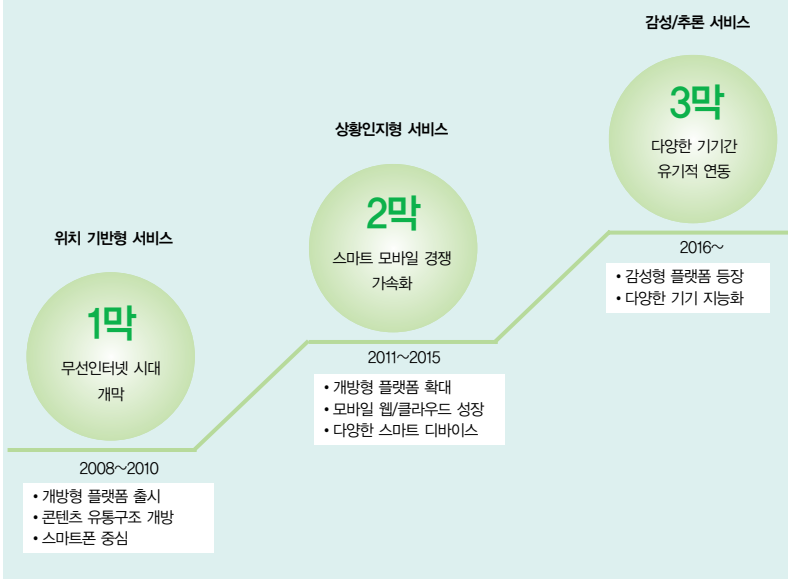
스마트 모바일의 대중화 촉진을 위해서는 이용자 측면에서 스마트 모바일 이용행태에 부합하는 요금제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무선인터넷 정액 요금제 가입자의 데이터 잔여량 이월, 통합요금제 도입 등 무선데이터 요금 제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해·부실 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 및 개발자와의 핫라인(Hot-line) 구축, 피해예방 알리미(SMS)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 모바일 정보 보호를 위해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무선인터넷 공짜 지역' 두 배 이상 확대

한편, 스마트 모바일의 생산적 활용을 통해 국가·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모바일 오피스 구축 지원, 모바일 유비쿼터스 홈(u-Home), 스마트 모바일 기반 공공응용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오피스는 이동근무나 현장근무가 많은 기업 중 모바일 오피스의 자체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모바일 오피스 관련 기술 고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응용 서비스는 교통(u-city와 스마트 모바일 연계), 의료(개인 맞춤형 의료정보

통신사업자에게 2010년 말까지 무선랜 이용지역을 2배 이상 확대[KT AP 3만6천개(2009년)→7만8천개(2010년), 4만2천개 증설, SKT AP 1만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와이브로 망을 2011년까지 84개 지역까지 확대하고 주파수 신규할당을 통해 네트워크 망 고도화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그림〉 'Smart Mobile Korea Vision 2010' 추진계획



제공 등), 교육(스마트 모바일과 디지털 교과서 연계) 선도 분야를 발굴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스마트 모바일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 국민이 단시일에 광대역 무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설비 기반 경쟁정책'을 도입하는 등 2011년까지 무선랜 이용지역이 세계 3위권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에게 2010년 말까지 무선랜 이용지역을 두 배 이상 확대[KT AP 3만6천개(2009년) → 7만8천개(2010년), 4만2천개 증설, SKT AP 1만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무선랜 구역 엠블럼을 도입해 이용가능 지

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와이브로 망을 2011년까지 84개 지역까지 확대하고 주파수 신규할당을 통해 네트워크 망 고도화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비록 스마트 모바일의 첫 시작은 뒤졌지만 2막, 3막의 차세대 스마트 모바일에서만은 우리나라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결재 보안 시스템, 모바일 가상 LAN 고도화 기술, 다차원 고정밀 위치측정 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모바일 기술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해 단말 플랫폼을 개발하고 모바일 사용자 상황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술, 플랫폼 보안 기술 등을 개발해 미래 모바일 인터넷 경쟁력을 적극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선인터넷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 기업 및 국내·외 대학, 연구소를 연계한 '개방형 R&D 체계'(Open Research Center)를 구축해 R&D와 인력양성을 결합·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5년간 총 1조5,069억원(정부 2,187억원, 민간 1조2,8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전체적으로 3조6,48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2,535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되고, 스마트 모바일 관련 산업은 5년간 총 16조9천억원의 매출 증대와 4만2천여명의 추가적인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새로운 스마트 모바일 생태계에서 서비스·네트워크·단말·OS·콘텐츠의 가치사슬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나리경제



홍진배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
jphong@kcc.go.kr

이것이 궁금하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란?



대표적인 SNS 웹사이트인 트위터의 메인화면

'온라인 인맥구축 서비스'로, 현실의 인맥을 온라인에서 관리하고 서로에게 지인을 소개해 관계를 넓히기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가리킨다. 서로의 지인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맥을 구축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트위터나 미투데이, 페이스북, 싸이월드가 바로 그것. 이들 사이트는 불과 4~5년의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이용자를 흡수, 인터넷 등 장으로 일어난 일대 변화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 더 큰 변혁을 끌어냈다.

SNS사이트는 주로 단문 메시지 서비스, 인스턴트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보다 쉽게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수의 사람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내용을 퍼 나르기도 쉽기 때문에 정보의 파급력이 매우 높다.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서 SNS는 새롭고 가장 강력한 홍보마케팅 수단이자 위기관리 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할 창구로 떠오르고 있다.

와이파이(WiFi)란?

무선접속장치(AP)가 설치된 곳의 일정 거리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리 무선네트워크다. 무선주파수를 이용하는 만큼 전화선이나 전용선이 필요 없어 이동성이나 휴대성이 뛰어나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주로 인파가 많은 거리, 외식·카페, 공공장소 등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점차 서비스 지역이 넓어지고 있다.

2010년 통신사업자별 와이파이 인프라 확산계획

KT

- 2009년 말 1만3천개의 네스팟존을 2010년 말 2만7천개로 확대
- 무선랜 수요가 많은 대학, 백화점, 외식·카페와 공공장소에 구축할 계획
- 연말까지 와이파이 품질을 3G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

SKT

- 2010년 전국 1만 곳에 와이파이존을 구축할 예정
- 장소: 극장, 대형쇼핑몰, 교통시설, 주요 거리, 레저시설, 레스토랑, 카페 등
- 구축지역: 수도권 및 주요 시급 지역 대상

LGT

- 160만대에 달하는 가정용 무선랜을 기반으로 FMC(유무선융합)서비스 추진
- 가정용 AP를 연말까지 250만대로 확대 예정
- 공공무선랜의 경우 2010년 전국 1만1천 곳에 핫스팟 구축 예정
- 장소: 제휴사, 인구 밀집지역 등

2015년까지 R&D서비스 전문인력 1,400명 양성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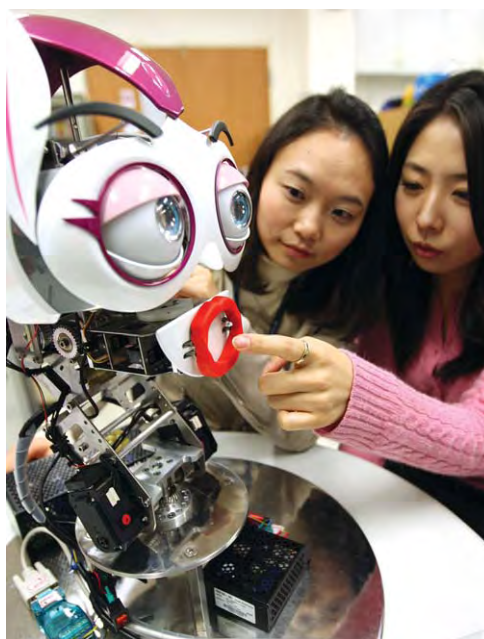
2000년대 들어 미국·일본·EU 등 선진국의 민간 기업들은 연구개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업이나 대학 등에 아웃소싱하는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연구개발의 동력을 찾는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주자에게 요청된 결과를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역할이 한층 커지고 있다.

아웃소싱 확대로 R&D서비스업 역할 커져

우리나라도 앞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이 미래 기술혁신 주체가 됨은 물론, 국가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이노베이션 인프라(innovation infra)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의 생산성 향상과 국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육성지원 정책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정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조세, 금융, 인력 및 시장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2008년 12월부터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R&D 분야에서도 개방형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개최한 '개방형 혁신을 위한 KIST 기술전 2009'에서 KIST 로봇시스템연구본부 에너지메카닉스 연구센터 직원들이 로봇을 살펴보는 모습

2010년 5월 현재 신고 요건을 갖춘 물리·화학·생물학 연구개발업, 공학 및 기술 연구개발업, 연구개발 컨설팅업 등 14개 업종 209개 업체에 신고증을 교부했다.

한편 민간에서는 2007년 11월 정부 지원을 받아 '한국연구개발서

비스협회'를 설립하고, 전문정보 공동이용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서비스 클러스터 구축, 연구개발서비스 업체를 활용한 공공·민간 부문의

전문 R&D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의 세부 실천과제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계가 국내 R&D 아웃소싱 시장을 주도하는 가치적인 산업군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요구에 부응한 질 높은 맞춤형 연구개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충실히 뒷받침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정책이 요

구된다.

현재 몇몇 대학 및 전문교육 기관에서 대기업·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개발서비스업계 종사자와 취업 희망자들이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전문지식 습득에는

부족하다는 관련 업계의 애로를 수용, 지난 6월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7월 중 전문교육기관 공모

이번 추진계획은 '지식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고급 인적자원을 확보해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내외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이공계 인력의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지식서비스 산업군(연구개발, 통신, 금융·보험, 교육, 의료, 오락문화서비스 산업 등)에 포함된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맵아기를 이제 막 거친 초기 성장기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산업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총 1,4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는 추정 신고업체를 기준으로 한 R&D서비스 업체수와 교육수요 조사결과를 반영(한국R&D서비스협회)한 것이다. 우선 2015년까지 1개 업체당 2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사업 시행과정에서 인력수급을 조사해 확대 조정할 계획이다. 인력양성은 현재 R&D서비스업체 종사자 및 산학연 R&D서비스 관련업무 담당자와 앞으로 관련 업계의 채용을 고려해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연구개발 관련 프로젝트의 발주와 수주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비즈니스가 주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현장교육을 병행

정부는 1개 업체당 2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2015년까지 1,400명의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인력양성은 현재 R&D서비스업체 종사자 및 산학연 R&D서비스 관련업무 담당자,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표〉 2010년도 세부추진 계획

	내 용	일 정
교육과정 및 과목	- 기본교육: 연구개발서비스업 이해(정책, 제도, 제4세대 R&D), 지식재산권관리, R&D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등 - 전문교육: 기술경영(연구개발 기획, 기술사업화), R&D 프로젝트 관리, 고급 지식재산권 관리 등	
인력양성기관	- 기본교육: 연구개발인력교육원(사업 총괄) - 전문교육: 대학(원)	
전문교육기관 공모	전국대학에서 공모, 관련교육 경험, 교육프로그램 우수성, 학사관리 선진성, 교수진 전문성 등을 평가해 2개 이내 선정	7월
교육생 모집	- 기본교육: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이 공모 - 전문교육: 대학(원)이 공모	7~8월
교수요원	- 기본교육: 자체 및 우수 외부 교수진* 활용 *외부 교수진은 R&D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기업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R&D서비스 전문가 - 전문교육: 전문 강사가 가능한 대학 우수 교수진 활용	
교육기간	- 기본교육: 2~3일 이내, 2~3회 교육 실시 - 전문교육: 1~3개월 이내, 과정보다 교육 실시* *교육생 편의 도모를 위해 야간, 공휴일 강좌 개설	9~11월
교육비	전액 무료(교육자 선 납입, 교육과정 이수 후 환급)	

할 계획이다. R&D서비스업체 종사자 및 산학연 R&D서비스 관련업무 담당자들에게는 선진 전략기획, 연구개발방법론, R&D서비스 역량 확산 커뮤니케이션 등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역량 심화 교육(전문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취업 희망자에게는 입사 후 산업현장에 조기 적응이 가능하도록 R&D서비스 기초지식 배양에 중점을 둔 실무능력 강화 교육(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교육과학기술부, R&D인력교육원, 전문교육기관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구축

해 지속적인 경력관리와 함께 취업 알선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설 연구개발인력교육원에 사업을 위탁해 추진하며, 대학(원)의 교육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교육과정 중 전문교육은 공모로 선정된 대학(원)이 담당하게 된다. 



김원근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 사무관
wgkim@mest.go.kr

민원인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한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시 사전동의 · 열람청구제 시행

서류 제출 없이 민원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덕분에 생활이 한결 편리해지고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행정·공공·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의 구비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열람·확인함으로써, 국민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앤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다. 체납관리, 토지소유자 정리 등 행정 내부 업무의 경우에도 정보 보유기관에 정보조치를 요청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즉시 열람·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이 서류 사용량을 줄이고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녹색행정과 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대폭 확대

정부는 지난 2002년 11월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등 17종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개시하고 3차에 걸친 행정정보 공동이용 구축사업과 수요자 맞춤형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정보를 총 82종으로 늘렸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홈페이지(pr.share.go.kr)

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당초 일부 행정기관에서 53개 중앙행정기관, 228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교육청, 58개 공공기관, 16개 시중은행, 숭실대학교 등 총 388개 기관으로 크게 늘었다.

실제로 2009년 한 해 동안 약 4,515만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구비서류 발급 없이 제공됐다. 이에 따라 민원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고 대기하는 시간과 교통비는 물론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등 관련 사회적 비용 약 1,635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약 9만1천톤의 탄소 발생량을 줄인 것으로 추계되

녹색행정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편익과 업무 효율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을 염려하는 우려도 일부 제기됨에 따라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난 5월 5일부터 전면 개정됐다. 이에 달라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우선 민원인(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가 신설됐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민원인이 공동이용의 목적,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이용기관의 명칭 등을 알 수 있도록 하

고 동의를 받게 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적 조치로서 행정·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 등이 공동이용한 개인정보 내역에 대해 정보주체가 이용목적과 시기, 정보 종류, 법적 근거 등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 상단의 ‘하나로민원’ 메뉴 또는 행정기관 등 민원처리기관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아 자신의 정보가 열람된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달라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행정·민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전자정부법」·시행령

전면 개정

이제 국민은 민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구비서류는 창구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동의하면, 창구직원은 민원인이 사전동의한 행정정보에 한해 열람·확인하고 신청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민원을 신청하기에 앞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홈페이지(pr.share.go.kr)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홈페이지에는 처음 이용하는 국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이번 전면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82종)

정보보유기관	구비서류(행정정보)
국가보훈처(2)	국가유공자확인원, 취업지원대상자증명
외교통상부(2)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법무부(4)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행정안전부(6)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토지분/건물분/주택분), 상훈수여증명서, 인감증명서
농림수산업부(5)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축산업등록증
지식경제부(2)	공장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보건복지부(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약사면허증, 방사선사면허증, 안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환경부(7)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 제2항 제3호),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노동부(1)	국가기술자격증
국토해양부(26)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축허가서, 선박원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설업등록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국세청(6)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관세청(2)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병무청(1)	병적증명서
경찰청(1)	운전면허증
소방방재청(1)	안전시설등원비증명서
특허청(4)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해양경찰청(1)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
대법원(3)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국민건강보험공단(2)	건강보험증(카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는 업무담당자들에게는 관련 법·제도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정부와 공동이용 관계자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

비스가 행정효율성 제고의 밑거름이 되고, 녹색행정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나라경제



서남교
행정안전부
제도평가과장
namkyo@korea.kr

품격 높은 창조사회, 매력 있는 패션국가

패션문화 지원 중기계획 '패션코리아 2015'



지난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패션문화 중장기 계획인 '패션코리아 2015'를 발표했다. 비전선포식에서 '미래 패션'이라는 주제로 멀티미디어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최 근 세계경제는 기존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창조산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의 이분법적 제도를 극복하고 신기술의 성장과 새로운 사회 조류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선진국은 패션산업을 이러한 창조산업 분류에 포함해 문화산업과 같은 정책적 틀에서 육성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라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는 패션은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주요 소통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의 균형 잡힌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한국패션을 통해 매력적인 국가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패션문화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동안 한국의 패션정책은 외형적 성장 위주의 산업정책으로 감성가치 창조를 통한 고부가가치 시장에 대

한 투자가 미미했다. 대량 생산 위주의 육성정책으로 패션의 예술적이고 창조적 시도에 대한 보호 및 지원도 열악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패션 경쟁력 강화가 초점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패션코리아 2015' 중기비전을 발표했다. 단기적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기존의 산업정책에서 한국패션의 근본적 자

〈표〉 패션산업 현황

패션시장 규모	약 30조원 (제조업 대비 3.2% 규모)
패션시장 성장률	0.3% (제조업 대비 3.8%)
업체수	7,255개 (제조업 대비 12.3%)
종사자	201,255명 (제조업 대비 8.0%)

생력과 창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목표를 전환하고, 패션을 이끌어가는 창조인력(creator)의 장기적 성장을 주도하는 유기적·단계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한국패션을 대표하는 통합형 브랜드(umbrella brand) 구축을 목표로 해외 전시회 및 컬렉션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한국 패션의 차별적 이미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의 전통 및 문화와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국패션문화 쇼룸, 패션문화 행사를 2015년까지 뉴욕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해 한국패션문화의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한류 확산과 패션 해외진출의 시너지 효과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한국 패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전통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발굴하고 현대적 기술과 트렌드를 활용해 현재 감성에 맞게 새로운 가치로 재창조하는 패션창작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과 패션의 협업환경 조성

패션의 창조적 시대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위해 신인 크리에이터 인큐베이팅(creator incubating)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국패션의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나 염색·직조·부자재 제작 공방 클러스터와 같은 문화예술과 패션의 협업환경 조성을 통해 창의적 크리에이터 양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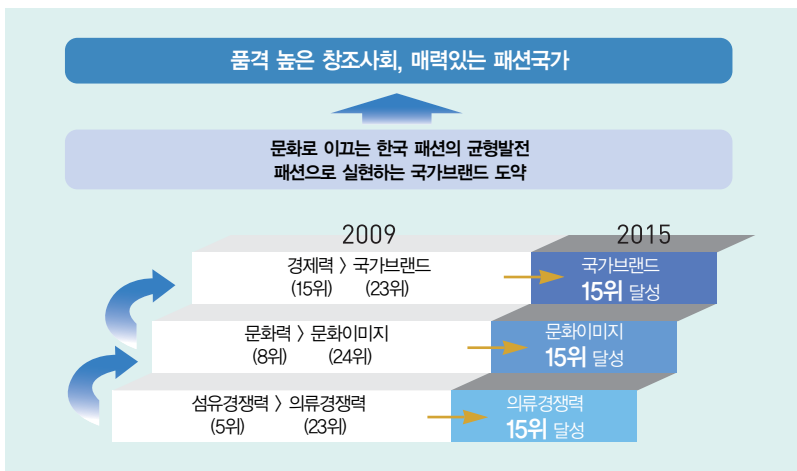
그리고 한국패션문화 수용능력(literacy) 향상 및 향유기회를 확대해 패션산업 소비기반 확산과 더불어 패션문화를 매개로 한 국민의 창의

한국패션을 대표하는 통합형 브랜드 구축을 목표로 해외 전시회 및 컬렉션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한국패션의 차별적 이미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의 전통 및 문화와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국패션문화 쇼룸, 패션문화 행사를 2015년까지 뉴욕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다.

〈그림 1〉 한국 패션문화 정착 개념도



〈그림 2〉 한국패션의 비전



력 증진 및 사회적 가치 공감도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패션정책의 유기적 추진체계 및 법령 정비를 통한 일관성 있는 패션문화정책 추진을 통해 정책 추진주체별 낭비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정부는 국내 패션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패션의 정체성을 글로벌 시장에 알려 한국패션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문화

적 자원이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로 승화되는 전기가 될 것이며, 한국패션이 창조경제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미경제



신용식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shinys999@korea.kr

사회적기업 육성, 이제는 지자체가 책임진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전주시 사회적기업 전통문화사랑모임의 한옥생활체험관에서 사회적기업 탐방단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서울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에서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전주시와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

올해 7월 1일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초창기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딛고, 현재 돌봄·환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319개 사회적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급성장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 빌 게이츠는 “사회적기업은 어려운 이웃의 일

자리 창출 및 자립지원에 기여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성과”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회적기업은 수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지니고, 영업활동에서 얻은 수익으로 재정 자립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기업이나 비영리단체와 엄격히 구분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지원 위주의 사회복지시스템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1970년대 후반 서

유럽에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등장했다. 이미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양극화·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 사회적기업은 1990년대 후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돼오던 노동자협동조합의 자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초다.

정부는 2003년부터 NGO와 협력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여 2007년에는 약 2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이 국가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단기적 성격을 지니고 저임금 일자리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일

자리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정착시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 1월 3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공포, 같은 해 7월 1일 시행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 못지않은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해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서비스 구매 등 착한 소비라는 문화적 흐름도 조성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3주년에 즈음해 지난 6월 11일 비

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 시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사회적기업 정책을 중앙정부 주도형에서 지역·시장 친화적 체제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추진체계로 바꾼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첫째, 지자체 중심의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할 것이다. 지자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의지 및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지원했으나, 7월부터 모든 지자체가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 충족 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정된다. 또한 지역특성과 발굴사례 등을 평가해 지역별 특성화된 사회적기업 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는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노동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수행했으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

이를 위해 지역 고용전문가·노사단체·대학 등이 참여하는 자치단체별 민관협의체도 적극 활용하고, 지식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일명 '프로보노')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경영지원, 전문성 기부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한 사회공헌 연계가 미

기존에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지원했으나, 7월부터 모든 지자체가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 충족 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정된다.

흡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전문직 종사자,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으로 분야별 인력풀을 구성해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이후 전문성 기부를 유도함과 동시에 사회봉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려 한다.

둘째, 기부문화를 조성할 것이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부문화 여건도 만들 것이다. 현재는 연계기업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금액의 5% 한도로 손금산입을 하였으나, 연계기업 외 법인·개인도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셋째, 관계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으로 5대 전략분야를 육성할 것이다. 문화·녹색에너지·지역·교육·돌봄 등을 사회적기업 5대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중앙부처 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앞으로 농림수산물식품부·보건복지부와 함께 농어촌 공동체, 돌봄 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넷째, 사회적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는 강화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범위가 협소하게 운영돼 민간의 창의적인 모델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적기업의 주된 유형으로 운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사회적기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잠재적 대상기관의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역량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인건비에 편중돼 사회적기업의 즉시 고용확대에는 유리하나 자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영컨설팅, 기술개발, 영업판로 개척 등 경쟁력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준하는 금융·구매, 세제혜택 등 정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기업·학교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이 생겨나고, 국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이다. 나라경제



마성균
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
msk85@hanmail.net

서민을 찾아가는 미소금융

미소금융 소액대출 확대



지난 5월 10일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종로구 하나미소금융재단을 방문해 '서민금융 통합서비스' 제공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저소득 서민층의 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활을 돕기 위해 미소금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미소금융사업은 휴면예금과 민간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 저소득 서민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대출하고, 대출과 병행해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통해 서민들의 자활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중순 첫 미소금융 지점

이 문을 연 이후 지난 6월 11일까지 전국에 총 48개의 지점이 설립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점을 꾸준히 늘려 나갈 계획이다. 대출실적의 경우 6월 11일까지 총 1,204명에게 93억원을 지원했다. 앞으로 지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현재 컨설팅 등 대출심사 과정에 있는 사람에 대한 대출절차가 완료되면 지원실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개월간의 미소금융 운영과

정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500만원 내외의 긴급소액자금에 대한 서민들의 수요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창업 또는 영업 효율화를 통한 자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미소금융의 취지, 서민을 위한 다양한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 여타 지원제도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도, 미소금융 창구에서 이러한 자금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미소금융 창구에서 여타 서민금융 지원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소액자금 지원제도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미소금융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각종 보증부 대출, 신용회복자금의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미소금융 창구에서 이들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5월 17일에는 '미소금융 소액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서민을 위한 소액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00만원 내외는 4.5% 이내 금리로 대출

우선, 기업과 은행들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 중심으로 긴급소액지원 성격의 미소금융 상품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소액의 운영자금 대출방식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 대상의 대출에 기업이나 은행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전국 16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상인회에 최대 1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상인회는 이를 재원으로 소속 상인들에게 500만원 내외 4.5% 이내 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의 대출모델을 음식점 영업자, 화물운송업자, 다문화 가정 등 여타 취약계층으로까지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그룹대출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러한 대출모델은 상환방법, 자금용도 등에 있어 기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창업의 경우 전체 사업자금 중 대출자 자신이 조달해야 하는 자금의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운영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을 대출받으려면 2년 이상 영업경험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1년 이상만 영업하고 있으면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존의 미소금융 상품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중전의 미소금융 긴급소액의 사업자금 지원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창업의 경우 전체 사업

자금 중 대출자 자신이 조달해야 하는 자금의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췄다. 또 운영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을 대출받으려면 2년 이상 영업경험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1년 이상만 영업하고 있으면 이들 용도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대출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3회 이상 컨설팅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컨설팅 수행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그 횟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출 절차도 간소화했다.

마지막으로, 미소금융의 수행방식도 창구에서 기다리기보다는 서민들을 찾아가는 미소금융의 관점에서 바꾸려 한다.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민생현장을 방문, 상담하는 활동을 늘려 가기로 했다.

대표적 친서민 정책인 미소금융사업에 대해 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찾아가는 미소금융서비스가 늘고 있다. 지난 5월 26일 수원 영동시장 내 서병우 씨(왼쪽에서 세 번째) 가방가게에 '삼성미소금융 서포터즈'가 방문해 오픈식을 축하해 주고 있다.

대출실적이 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미소금융사업이 아직 초기단계라는 점과 단순한 자금의 대출뿐 아니라 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자활지원을 병행하는 특성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미소금융의 대출이 본궤도에 오르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하게 대출 실적을 늘리는 데 집착하기보다는 긴 안목을 갖고 서민들이 미소금융을 통해 자활에 성공하는 모범사례를 쌓아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신라경제



신진항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장
jcshin2@korea.kr

기금 소진돼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의 학기술의 발달과 식생활 영양개선 등으로 노후가 길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통계청이 지난 5월 11일 발표한 ‘2008~2009년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보면 응답자의 80.9%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이 가운데 38.5%는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준비 방법으로 꼽았다. 국민연금부터 확실히 챙기는 것이 길어진 노후 30년을 대비하는 지혜임을 엿볼 수 있다.

가입기간 길고 소득 높을수록 많이 받아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립기금 규모가 2010년 4월 말 현재 293조6천억원에 이르러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매년 지급된 연금액 규모도 2002년도에 1조9천억원으로 GDP 720조원 대비 0.3%에서, 2009년 7조5천억원으로 GDP 1,063조원의 0.7%로 증가했다. 2010년 4월 말 현재 236만명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했고, 오는 9월쯤에는 전체 연금수급자가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연금수급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15년 350만명, 2020년 470만명, 2035년 이후가 되면 1천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특히 4월 말 기준 20년 이상 가입해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4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받는 연금액을 살펴보면 60~80만원이 35.5%(1만4,825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 80~100만원이 22.1%(9,225명), 50~60만원이 19.5%(8,145명)순이다. 100만원 이상 받는 수

급자도 10.7%(4,485명)를 차지한다.

국민연금액 산정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아 보험료를 많이 납부할수록 연금액을 많이 받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므로 가입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본인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소득을 조정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전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적이 있다면 그 반환일시금을 반환해서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가입은 돼 있었지만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것은 연금기금이 소진되면 납부한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경제생활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상대방이 지불할 돈이 없으면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관한 한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제도는 기금이 없더라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제도는 시행 후 일정기간 동안은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아서 기금이 적립되게 돼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져서 결국은 적립된 기금이 소진된다. 그러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그해 지급할 연금은 후대로부터 보험료를 걷는다.

이렇게 대대손손 이어가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이다. 현재 160여개 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금이 고갈됐다고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



사유가 여기에 있다. 이 경우 저출산으로 후세대 부담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후손에게 부강한 나라를 물려준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져 보험료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유이다.

또 다른 오해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적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또한 걱정할 일이 아니다. 처음 연금을 받게 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고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 계산하며, 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올려 지급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노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노후 이전이라도 연금을 내던 중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나날이 복잡해지는 교통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이 제도는 우리의 생활과 더욱 밀접하게 작용할 것이라 하겠다. 즉, 장애연금제도는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현명한 대비 수단이 된다. 2010년 4월 현재 11만1,980명이 장애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전업주부 임의가입 바람직

요즘은 부부가 길어진 노후를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소득이

국민연금액 산정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아 보험료를 많이 납부할수록 연금액을 많이 받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므로 가입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본인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소득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을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전업주부 등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있다.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전업주부는 물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미래는 기대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한다. 암울한 미래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다가올 미래가 밝은 미래가 될지 아니면 어두운 미래가 될지는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달려 있다. 소중한 인생,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펼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나와 함께



김신철
국민연금공단 홍보실장
kso@nps.or.kr



대한민국을 웃게 하는 사람들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는 FTA의 활용도를 높이고 취약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FTA와 관련한 모든 국내대책을 총괄하는 곳이다. 1본부, 1단, 6팀 및 1개 TF 등 총 46명으로 구성된 본부는 기획재정부는 물론 지식경제부·농림수산물부·문화체육관광부·관세청·법제처·KDI 등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각 분야 전문가가 어우러져 FTA가 주는 경제적 효과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들. 바쁘게 뛰고 있는 그들의 어깨에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바쁘다>에서 그들이 일하는 현장을 구경해 보실까요?



왼쪽부터 기획총괄팀 허정훈 사무관과 마창환 팀장



조사분석팀 이동수 사무관과 신언주 팀장



대외협력팀 김영돈 사무관과 이경문 팀장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6개국과의 FTA가 발효됐다. 또한 미국·EU와의 FTA도 발효를 앞두고 있어 머지않아 본격적인 FTA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FTA는 체결도 중요하지만 이를 잘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본격적인 FTA 시대를 앞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힘 쏟아

FTA 국내대책본부는 FTA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FTA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기획총괄팀은 FTA 국내대책 전반을 관리한다. 우선 민·관·학계 위원 28명으로 구성된 심의기구인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지원·운영하며, 주요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등 FTA 국내대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한 FTA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들의 협력 및 조정을 담당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발전적인 FTA 국내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월 현판식을 가진 FTA 종합지원센터는 기업의

적극적인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태스크 포스팀(Task Force Team)이다. 지식경제부·관세청 등 무역 실무 현장에서 기업들과 함께 해온 직원들, 기업 컨설팅을 했던 민간 전문가 등으로 짜여졌다. FTA 활용의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FTA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설명회·교육 등을 실시한다. FTA 종합지원포털(FTA.korea.kr)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FTA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FTA 관련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홍보팀에서는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기업의 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는 물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하철·버스 등의 교통시설, 온라인매체 등을 활용해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알리고 있다. 다가올 FTA 시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농업인 및 농업 분야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대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FTA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원대책팀 김남희 사무관과 김금남 팀장



산업지원팀 정석진 팀장과 하중수 사무관



교육홍보팀 한혜성 사무관과 정희갑 팀장

취약산업 지원대책 종합·조정

본부 유일의 여성 팀장이 이끄는 조사분석팀은 각 FTA 협상에 참여하면서 협상동향을 분석하고 쟁점을 파악해 대응자료를 준비한다. 우리나라는 다수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각 협상 진행상황에 대한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인 분석 및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직원들은 눈과 귀를 24시간 내내 열어 놓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FTA 전문잡지인 『FTA 세상』을 격월로 발행하고 있다. 취업·교육·트렌드 등 다양한 일상을 소재로 FTA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FTA로 모든 산업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취약 분야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면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 분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지원대책팀은 농수산업 등 국내 취약산업의 직접적 피해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종합해 조정한다. FTA 이행을 위한 법령을 제·개정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취약 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실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산업지원팀은 체결된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및 산업 부문별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소비자 후생이 얼마나 증진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한다. 올 하반기에는 FTA 박람회를 개최해 국민과 기업이 FTA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 FTA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며 FTA 활용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설명회, 컨퍼런스 및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외협력팀은 협상이 완료된 FTA의 원활한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국회·시민단체·지역포럼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FTA 민간대책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FTA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 유도와 긍정적 여론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을 돌며 지역 FTA 포럼 담당자 워크숍·간담회 등을 실시해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지방 기업이 자발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기도 부여하고 있다.

선진국 진입을 위한 중요한 경제전략 FTA, 국내대책본부 직원들은 성공적인 FTA 시대를 위해 오늘도 쉬 없이 달리고 있다. 나라경제

“기업이 FTA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돕겠습니다”

FTA 국내대책본부장에 취임한 지 약 2개월 정도 지났다. 어떤 일에 주력하고 있나?

기업의 FTA 활용실태를 우선 파악하고 있다. 5개의 FTA가 발표됐지만 칠레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기업의 활용도가 아직 낮은 수준이다. 하반기에는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FTA가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이를 제대로 알릴 교육·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할텐데...

국민들에게 FTA 필요성, 협상결과,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 아니겠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와 홍보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FTA 종합지원포털을 개편하는 등 관련 정보의 상시제공에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FTA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의 담당공무원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추진한다. 농업 등 FTA 체결에 따른 취약 분야 종사자들,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대책 등을 교육해 이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려 한다.

FTA종합지원센터가 최근 현판식을 가졌다. 어떤 목적으로 설립됐나?

현재 FTA활용 대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대책본부를 비롯해 무역협회·코트라·관세청 등이 각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역할 중복이나 사각지대 등이 나타났을 때 조정이 가능하다. 수요자 측면에서 빠르고 손쉽게 FTA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문의할 수 있는 FTA 종합상담창구라고 생각해 달라.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지원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국내외 설명회, 가이드북 제작, 박람회 개최 등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중심의 실용적 지원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이 공식 서명된 지 벌써 3년이 넘었다. 그러나 발효가 늦어져 국내 FTA 대책도 답보 상태인 것 같다.

그런 측면이 없진 않다. 하지만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올 11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비준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우리는 FTA 체결을 계기로 일부 취약 분야의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경제선진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 연계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다.

그토록 우리에게 FTA가 중요한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경제규모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은 오로지 세계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ASEAN·인도·미국·EU 등과 FTA를 체결해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거대시장과의 FTA 체결은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 추세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활로로 개척하기 위한 돌파구는 FTA뿐이다.

향후 계획은?

FTA 특혜관세 활용도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집중 추진해 FTA 협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생각이다. 한·EU FTA가 발효될 것을 대비해 기존의 FTA 피해보전·경쟁력 강화 대책도 점검할 예정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국·일본과의 FTA 추진에 대비해서도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의견 수렴, 갈등 조정, 국내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등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할 일이 많다. 이와 더불어 FTA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활발히 펼칠 것이다.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모든 FTA 국내대책본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라 밖 경제’는 해외 주요 경제저널의
유익하고 흥미있는 기사를 소개하는 난입니다.

급변하는 중국의 노동 환경

Change is finally afoot for China's workers, Financial Times, June 2

중국 전역의 혼다자동차 생산에 급
제동을 건 광둥성 부품생산공장
파업 이후 두 가지 성명이 발표됐다. 첫
번째 성명은 “이번 파업은 사측이 노동
자에게 지급하는 낮은 임금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 시스템은 노동자 집단행위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한다. 두 번째 성명은 “일반 노동
자는 지난 30년간의 개방에 따른 경제
적 번영에서 가장 적은 몫을 받았을 뿐
이다. 혼다공장의 일시적 파업은 중국
내 공장에서도 조직적인 노동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첫 번째 성명은 1989년 천안문 사건 당시 노동자들과
학생들을 연합하려 했던 전직 철도 전기기술자 한동팡 씨
가 작성했다. 첫 성명과 거의 유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두 번째 성명의 출처는 놀랍게도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타블로이드판 신문 『글로벌타임스』이다.

그렇다면 천안문 사건의 주동자인 한동팡 씨와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글로벌타임스』가 이처럼 민감한 이슈
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중국은 언론매체를 통해 노동계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제 값싼 노동력을 무한정 공급하던 시절은 끝나가
고 있다. 이는 인구학적 원인에 일부 기인한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40세 미만의 노동력 공급은 최
대 20%가량 줄어들었다. 노동력 공급의 감소는 곧 노동자
들의 협상능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례로 혼다공장
의 노동자들은 50%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1980
년대와 1990년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1세대 이주민
들과는 달리 최근의 이주민들은 선택의 폭이 더 넓고 기대
치도 더 높다. 다수의 이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까
지 도시에서 일하며 수년간 저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5월 26일 중국 광둥성 포산 소재 혼다
자동차 공장 입구에서 노동자들이 모여 파업
중인 모습

도시에서 정착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그들
이 더 높은 임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 이유는 공산당이 노동환경 개
선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일본·미국·유럽 등의 다국적
기업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수
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덩샤오핑은 중국
이 부유해지는 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기업
이익에서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지도부가 강조하는 ‘조
화로운 사회’와는 상충된다.

노동계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 가는 듯한 다른 조짐들도 있
었다. 지난 2008년 중국 당국은 서면 노동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노동계약법」을 제정했다. 점차 커지는 임금 압
박과 함께 이처럼 변화하는 중국의 노동환경은 그동안 중
국이 제공해 왔던 값싼 임금, 무파업, 자유로운 고용과 해
고에 익숙해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분명한 시사점을 던
져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철수할 기업
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단지 저비용 생산 기
지로서의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기
업에 있어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자 자사 글로벌 공급망의
필수불가결한 일부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 같은 클러스터
효과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중국에서 철수해 다른 곳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국 당
국은 임금 인플레이션을 주시하겠지만 과감해진 노동계에 계
속 조심스러운 지지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조직화
된 노동력이 정치 세력으로 진화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
경제

정리 조현주 KDI 경제뉴스분석팀 전문원

정부가 3D 업종의 대명사로 인식돼온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섰다. 뿌리산업의 경쟁력 제고 없이는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일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뿌리산업을 新3D(Digital, Decent, Dynamic)로 바꾸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인력공급 시스템 확충, 기업 경영여건 개선, 기술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라경제』는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살펴보고, 현장 목소리,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았다.

뿌리산업, 新3D산업으로 거듭난다!



뿌리산업, ‘제조업 선도하는 명품 성장산업’ 된다



도요타의 리콜 사태 이후 한국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Global Transpor Tech 2010'에는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는 물론 메이저급 바이어 20여개국 250여개사가 대거 참가했다.

올해 초 세계 1위의 자동차 회사 도요타가 미국·유럽·중국 등에서 총 760만대의 차량을 리콜 조치했다. 그 원인은 협력업체에서 조달받은 부품 결함 때문. 경제적 손실은 차치하더라도 품질 신뢰의 도요타 이미지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도요타 리콜 사태는 우리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기업 제품의 부품을 조달하는 협력업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그간 우리나라는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을

주력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고, 뿌리산업으로 대변되는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열처리·표면처리 등 중소 협력업체들이 그 뒤를 떠받쳤다.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를 만든다고 하자. 엔진 블럭과 피스톤은 주조, 변속기 기어는 소성가공·열처리, 차체는 금형·소성가공·용접 등의 기술과 연관돼 있다. 중량으로 따지면 차 한 대의 뿌리산업 비중은 자그마치 86%나 된다.

뿌리산업에서 중소기업 비중 95.8%에 달해

제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뿌리산업은 소위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으로 불리며 사양산업으로 인식돼 그 역할과 중요성이 낮게 평가돼 왔다. 이에 정부는 뿌리산업을 재평가해 적극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지난 5월 발표했다.

2008년 기준, 6대 뿌리산업은 총 생산액 29조원, 수출 93억달러, 고용 33만명(전체 제조업 고용 279만명의 약 11.8% 차지)으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 측면을 살펴보면, 약 1만개 뿌리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이 95.8%에 이르고, 54.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수도권 밀집형 구조를 띤다.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는 90% 이상 기업이 공급망 구조상 최하단인 2차 내지 4차 협력사로, 대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인력 측면에서는 젊은 층의 신규취업 감소로 고령화가 심화돼 40~50대 근로자가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구성도 단순노무직과 기능직 위주라 기술혁신을 주도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기술력도 미흡하다. 범용 기술을 중심으로 일부 경쟁력을 보유한 업종도 있으나 산업 전반적 기술력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열위에 있다. 특히 고급 기술을 요하는 첨단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뿌리기술 선도기업은

〈그림〉 자동차·조선 핵심부품과 뿌리산업 연관도



전체 기업의 약 8%인 822개사에 불과하다. 일본이 전체 뿌리기업의 17%에 해당하는 약 3천여개의 첨단 뿌리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인다.

융합효과 극대화하고 인력공급에 주력

우선, 뿌리산업 구조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기존 뿌리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집산화·공동화·협업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 간 협동화 사업실천계획을 수립해 승인 받은 업체에는 정책자금 융자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부여할 것이다. 또한 주조·금형·열처리 등 상호 연계가 가능한 업종을 동반 입주시키는 융합형 단지를 김제 지평산업단지에 조성할 방침이다. 단지 조성 시 기업 간 원·부자재 및 에너지 공동사용, 제조설비 공동활용, 제조공정 혁신 등 업종 내, 업종 간 협업이 가능한 녹색공정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 새로운 공법이나 신제품을 도입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건설하는 소규모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뿌리산업의 생산성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입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다음은 인력공급 시스템 확충이다. 뿌리산업 분야 기술은 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현장 기능인력에 체화돼 발전하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핵심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선 꾸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뿌리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재학생을 2010년 600명 수준에서 2012년 1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2012년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 요원제도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업종별 전문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해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뿌리산업 분야 명장(名匠) 확대, 2대 이상 가업 승계 중소기업의 뿌리

산업 명가(名家) 선정 및 혜택 부여 등이 있다. 뿌리산업 분야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혜택은 시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기업경영개선 지원 및 맞춤형 R&D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뿌리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조달

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해 영세 뿌리기업 대출 보증 시 우대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수요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일정액을 출연해 뿌리기업의 자재구입 지급보증, 계약보증 등을 지원하는 뿌리산업 이행보증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뿌리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 뿌리산업 IT 융합지원단을 운영해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고속터닝 기능인력의 연구원 채용, 마이스터고 등과 연계한 학·연 공동지도 교수제 도입 등 기술인재 양성 역할도 확대할 것이다. 중소기업 주도적 기술 개발이 어려운 미래 선도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로 중·장기 R&D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 시점에서 상용화가 시급한 기술은 단기 R&D를 지원함으로써 뿌리기업이 기술선도 기업으로 재탄생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뿌리산업의 튼튼한 기반 없이는 기존 제조업은 물론이고 향후 우리의 먹을거리를 창출할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전도 어렵다. 정부는 2013년까지 뿌리산업을 생산 45조 원, 기술선도 기업 1,500개의 튼튼한 산업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뿌리산업을 ‘제조업을 선도하는 명품 성장산업’으로, 디지털화를 통해 활기차고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新3D(Digital, Dynamic, Decent) 산업’으로, 단순 기능공 중심에서 ‘장인이 중심이 되는 산업’으로 키워나갈 것이다. 나의 경제



이승우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장
aerock@mke.go.kr

뿌리산업을 중소기업형 전략산업으로 육성



정부는 뿌리산업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새터민에게 직업훈련, 취업알선, 재직자 훈련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의 한 용접공장에서 기술을 배워 일하고 있는 탈북자 김세철 씨

초가 되고 있다. 뿌리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기반기술 내지는 최종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짓는 기초 공정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자동차·조선·IT 등 주요 수출제품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확보하기 위해선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뿌리산업 종사자에 주택 우선 공급

뿌리산업은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이다. 국내 전체 뿌리기업 약 1만개 중 95.8%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주요 대기업의 2~4차 협력사가 90%를 차지하는 대기업 종속형 구조로서 공급망의 최하단에 위치한다. 따라서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수요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대기업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및 기술개발 비용 전가 등은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는 수익성 악화, 기술개발 의욕 저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뿌리산업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속적

흔히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이라고 불리는 '모노쯔쿠리(monozukuri) 정신'을 기반으로 '모노쯔쿠리 경영'이 이뤄지고, 이러한 정신과 경영기법이 생산현장의 기술과 제조과정상의 제품에 체화된다. 이것이 일본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데 기

로 추진하고, 뿌리산업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

최근 극심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심각하다. 뿌리산업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뿌리산업 분야 경영자들은 이들

업종이 대표적 3D분야로 인식돼 현장에서 사람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정부는 뿌리산업 분야에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급하고, 뿌리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무교육과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인력난을 완화하려 한다.

먼저, 뿌리산업 분야 마이스티고 학생을 현재 600명(8개교) 수준에서 2012년까지 1천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의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화 전문계고와 뿌리기업이 취업협약을 체결해 현장 수요에 맞는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할 것이다. 또한 이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새터민(북한이탈주민)에게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이후 재직자 훈련 등을 적극 지원해 뿌리산업 분야에서 새터민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뿌리산업 종사자의 자금심 고취 및 후생복지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뿌리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지난 5월 개정했다. 아울러 재정당국과 협의해 뿌리기업 밀집지역 내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 자녀 교육시설 설치 등 복지시설 설치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우수 기술 사업화에 올해 1,580억 지원

제조 공정에 있어 낙후된 뿌리산업의 IT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뿌리기업의 열악한 제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제조 공정에 IT 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혁신을 지원한다. 디지털 설계지원 장비 등을 활용해 지방중소기업청과 생산기술연구원에 사이버 설계센터를 운영하고,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가상 제품설계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청, 생산기술연구원 지역본부, 국책 연구소, 지역대학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IT 융합지원단을 구성해 뿌리산업에 IT 융합공정을 보급하고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은행 등 민간자금과 신·기보 등의 보증 이용이 어려운 영세 뿌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우대 보증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올해 중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R&D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뿌리산업의 경우 핵심기술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뿌리 중소기업에 R&D 자금을 확대·지원하고자 한다.

먼저, 뿌리산업 분야의 전략기술 선정 및 전략기술에 대한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중소기업형 유망기술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유망기술을 통해 뿌리기업들의 기술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각각 미래 선도기술과 단기 상용기술에 대해 과제 특성에 맞는 맞춤형 R&D를 지원하고 그 규모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올해 뿌리산업 전용 R&D자금으로 15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개발기술사업화용자, 2010년 1,580억원)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지난 5월에는 ‘개발기술에 대한 사업화 자금 대출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과 체결해 R&D 성공기업에 대한 사업화 용자자금을 저리로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은 뿌리산업을 중소기업형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뿌리산업의 범위, 세부 지원수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뿌리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기업 지정제도 등을 운영해 뿌리산업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할 것이다. 뿌리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판로지원, 해외시장 진출 등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 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뿌리산업 업계의 각종 현안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뿌리산업 종사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뿌리산업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주력 제품의 기초를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나의경제



신경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장
krshin@smba.go.kr

기술개발 · 기술지원 선순환체계 갖춰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로조이닝센터 내부 모습. 이곳에서는 전자패키징 · 미세용접 분야 제품 개발 후 성능테스트를 할 수 있다. 마이크로조이닝(micro-joining)이란 2개 이상의 소재와 부품 등을 기계 · 전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초정밀 조립기술로, 정밀접합 및 전자패키징 분야를 포괄한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 조선 · IT 등 수출 주력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짓는 기초공정 산업으로 국내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의 근간이다. 뿌리산업 강국이 제조업 강국이라는 등식은 일본 · 독일 사례에서 잘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뿌리산업의 경쟁력은 세계최고 대비 약 80% 수준이다. 특히 일본과의 기술경쟁력 격차는 답보 상태다.

뿌리산업 기술경쟁력, 세계 최고의 80% 수준

선진국 기술의 모방이나 국산화 기술 확보만으로는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선진국의 환경규제 선점과 강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국내 뿌리산업은 환경 · 에너지 규제 대응역량이 취약하다. 이는 수출부진, 선진국 시

장접근 장애, 제품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이어져 무역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세계 금융위기 이후 다시 살아나고 있는 국내 제조업 경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 뿌리산업 기술은 기업주도형 · 단위기술 개발과제 위주로 지원을 받아 왔다. 특정 단위기업 기술 개발로 뿌리산업 기술의 특징인 산업 공통기반기술 개발 및 파급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1997년 대비 매출 138%, 매출이익 128%를 달성해 양적 성장은 충분히 구현됐다. 이젠 독일 · 일본 등 뿌리산업 선진국이 추구하고 있는 공통기반기술 수준의 질적 향상 정책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선도 뿌리기업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기술 선점,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기업은 정책적 기술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역량 제고의 두 축이 선순환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가 잘 구축되기 위해선 뿌리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

선진국의 뿌리산업 기술은 재료·설계·가공·성형·측정·공정설계 기술 등이 IT산업과 접목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기술지원 체계 또한 산·학·연·관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활용, 기업 간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각 지역의 연구소·대학은 연구지원센터를 설립, 엔지니어링 설계 및 시제품, 분석기술, 평가기술, 양산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및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고효율화와 더불어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WEEE(폐전자·전기제품 처리지침), ELV(폐자동차 처리지침) 등 환경규제에 대처하기 위한 뿌리산업 공정혁신·공정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T기반 생산공정으로 전환 서둘러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은 중소 뿌리기업의 기술개발은 물론 기술지원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언제든 연구소에서 실험하고 시작품을 제조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기업지원뿐 아니라 기술 상용화, 마케팅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생기원은 중소 뿌리기업과 400여건 이상의 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술지원 측면에서도 3만건 이상의 중소기업 장비제공 시작품 지원, 시험평가·분석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일례로 화남전자는 생기원과 공동 연구개발,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규제에 엄격한 유럽 수출 길을 열었다. 유럽 바이어로부터 무연 솔더링(납 성분 없이 처리하는 친환경 접합) 제품을 의뢰받았으나 자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3년간의 공동 기술개발 노력과 설계부터 신뢰성 검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제때 생산을 할 수 있었다. 수전금구류(수도꼭지) 주물 전문업체인 하이스턴은 평소 높은 불량률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생기원의 문을 두드렸다. 주조 분야 국내 최고 기술을 보유한 생기원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지원으로 불량률을 50% 이상 떨어뜨렸다.

국내 뿌리산업은 중소기업 구조 특성상 전체 업체의 30%만이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소를 제외한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보 비율은 35% 수준이다. 중소기업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2.8% 정도로 미국의 1/10.6, 일본의 1/2.2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생기와 같은 뿌리산업 전문 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술개발은 '따라잡기'(catch up)에서 '돌파'(break through)로 방향을 전환하고, 기술지원은 단순지원에서 상용화·마케팅까지의 전주기적 지원이 선순환돼야 한다. 이제 우리의 뿌리산업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뿌리산업 기술개발도 녹색화·고효율화·고부가가치화의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뿌리산업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해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공정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기술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뿌리산업 제조공정 및 에너지 소비정보 등의 최적화 제어환경을 IT 기반과 접목해 신기반기술로 발전시켜야 한다. 기존의 현장경험에 의존한 제조방식에서 탈피, IT기반의 생산공정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조속히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 온기가 산업에 잘 퍼질 수 있도록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고효율·저에너지 장비 및 설비 개발이 연계돼야 한다. 그래야 부가가치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체계적인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뿌리기업으로서는 가뭄에 단비를 맞은 격이다. 뿌리산업 경쟁력이 일본·독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뿌리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정책의 지속적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 뿌리산업을 중소기업형 전략산업으로 규정해 기술·인력·자금·환경 등 세부 지원수단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김원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예코공정연구부장
wykim@kitech.re.kr

“도금기술 없이 첨단산업 한발짝도 못 움직여요”

황재익 (주)제이미크론 사장

여기가 정말 도금공장? 금속을 세척하고 금을 입히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도금공장은 지저분하다는 고정관념은 옛 이야기다. 도금 전문기업인 제이미크론(J-micron)은 책상 대신 기계가 있을 뿐 어느 사무실 모습처럼 깨끗하고 쾌적하다. 도금은 반도체와 통신·전자·자동차 부품의 부식을 방지하고 접촉 저항을 낮춰 제품 수명을 늘려주는 핵심 뿌리산업이다. 최첨단 공법과 친환경 기술로 도금산업의 인식을 바꾸고 있는 제이미크론 황재익 사장(66세)을 만났다.

제이미크론은 어떤 회사인가?

PDP·LCD 커넥터, 모바일 커넥터, 케이블, LED 리드프레임 도금 등 특수 표면처리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13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올해 400억원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부설연구소를 운영해왔고, 매출 5%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다.

부설연구소까지 갖추고, 매출의 5%를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니 놀랍다. 이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닐 텐데 힘든 점은 없나?

사람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다. 중소기업에선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할 사람을 찾은 후에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성실히 일하겠다는 태도만 가진 사람이면 환영이다. 연구원들에게는 외국어 교육도 하고 해외전시도 다녀오게 한다. 원하면 대학원까지 지원해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도금산업의 중요성과 비전을 심어준다. 물론 일과 함께 병행해야 하니 본인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힘들지만 미래를 향해 꿈을 품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대기업에서 자문을 받으러 왔다. 하지만 여전히 인력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 회사는 기존 직원들이 친구, 친척, 고향사람 등을 추천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근무 환경이 깨끗하고 고급스러워 보인다.

3년 전 리모델링을 했다. 근무 환경이 지저분하면 근로자가 스스로를 무시하게 된다.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면 자

공심은 더 높아지고 실력 또한 향상된다. 직원 유니폼도 밝은 연두색으로 맞췄다.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구내식당이다. 주방직을 까다롭게 뽑고, 최상의 식재료를 사용한다. 사람이 최우선인 ‘행복한 기업’이 우리 모토다.

폐수재활용시스템(CLRS; Closed Loop Rinse Water System)을 독자 개발해 환경부장관상을 2회 수상하는 등 친환경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녹색성장으로 환경 문제를 고민 안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개발에 특별한 동기라도 있었나?

도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폐수에 대한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근본 해결을 모색했다. CLRS 시스템 구상은 1997년 시작했는데, 마침 그 다음 해 지식경제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본격적 연구에 돌입했다. CLRS는 완전자동화 시스템 설비로 조작이 간단하다. 적은 인원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2차 오염물인 폐기물(슬러지)이 발생하지 않는다. 화학약품 사용량이 적어 운전비용 역시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02년부터 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매일 650톤의 폐수가 재활용돼 연간 3억원이 절감된다. 수도물보다 더 깨끗이 정화되면서 환경을 살리는 것은 물론 제품의 품질도 훨씬 좋아졌다.

다른 업체에서도 관심이 높을 것 같다.

물론이다. 이에 우리 시스템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도 세일즈하고 있다. 도금업체가 우리나라도 많지만 중국에는 굉장히 많다. 안타까운 것은 국내 중소기업이 열악한 상황 때문에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한다는 점이다. 얼마 전 열린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 국장을 만나 이 이야기를 했더니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시스템 확산을 위해 건의해 보겠다고 하더라.

뿌리산업으로서 도금산업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

최근 전기자동차가 주목을 받으면서 도금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졌다. 잘못 도금된 부품이 있으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첨단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도금기술이 함께 발달해야 한다. 도금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 뿌리산업이라는 말을 누구인지는 몰라도 참 잘 지었다(웃음).



레이저를 이용한 최첨단 도금작업 준비 모습

최근 정부가 발표한 뿌리산업 육성책에 기대하는 점이나 보완했으면 하는 점은?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정부 제안이 너무 반가웠다. 우리 회사 직원에게 많이 홍보했다. 인재양성 마이스터 학교 활성화에도 기대가 크다. 뿌리산업 현장에 대한 직접적 투자도 필요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전제돼야 하는 것은 교육이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뿌리산업이 정말 꼭 필요하고 자랑스러운 직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

제안하고 싶은 점은 기업 상속에 관한 부분이다. 뿌리는 오래가야 한다. 자꾸 뿌리를 옮기면 엉킨다. 뿌리산업 사업자들은 대부분 60~70세로 후계자를 생각해야 하지만 세금 부담으로 회사를 팔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1세대의 노력인 뿌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또한 대기업·중소기업과 상관없이 연봉을 기준해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데,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세금 우대 혜택이 있었으면 한다.

앞으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반기 실적이 나온 직후인 8월 말~9월 초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뿌리산업은 일본이 강하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자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의 뿌리산업도 일본을 앞지를 준비가 돼 있다. 뿌리가 아주 튼튼히 자리를 잡아 거목이 되길 바란다. 新3D가 디지털화하고(Digital), 역동적이며(Dynamic), 품위 있는(Decent) 산업이라던데, 여기에 꿈(Dream)도 추가했으면 좋겠다. 나리경제

스위스에서 한 수 배우자



한 스위스 학생이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는 법을 익히고 있다. 스위스 학생들 중 상당수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직업학교에 진학해 학교와 일터를 오가며 직업훈련을 받는다.

“금형 기술이 승부를 갈랐다.” 최근 삼성전자가 전 세계 TV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배경과 관련, 전자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사연은 이렇다. 삼성전자 LCD TV는 다른 경쟁사의 LCD TV와 디자인의 차별화가 뚜렷하다. TV 테두리가 빛의 양과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른 고광택 색상을 연출, 마치 유라공예품 같은 느낌을 주는 것. 이런 디자인이 가능했던 것은 다름 아닌 금형기술과 사출기술 덕분이란 설명이다. 뿌리산업의 경쟁력이 결국 세계 1등 제품의 밑바탕이 된 것이다.

이처럼 주조·금형·용접·단조·열처리·표면처리 등 다른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도 정작 기능인력은 감소 추세여서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초임 연봉으로 1,993만원을 제시했으나 대졸 구직자는 2,456만원을 희망해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중소기업은 대부분(46.3%) 생산직 근로자 채용을 원했지만, 구직자들은 사무·관리직(45.3%)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이러한 괴리는 결국 청년 실업자가 넘쳐나는데도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은 정작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미스 매치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실마

리는 스위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위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만5천달러(2008년 기준)나 된다. 우리나라(2만1천달러)의 3배가 넘는다. 그런데 이런 스위스의 대학 진학률은 얼마나 될까. 16%에 불과하다. 우린 84%다. 스위스에서는 의무교육 과정인 9년의 초·중학교(Volksschule)를 마친 15세가 되면 인문계 고등학교(Gymnasium)로 진학하는 20%를 제외한 대부분 학생이 직업훈련학교(Beuflehre)로 간다. 특히 직업훈련학교도 5일 중 하루만 학교에 가고 4일은 자신이 선택한 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한다. 실습생은 2~4년 후엔 대부분 정식 직원이 된다.

흥미로운 점은 직업훈련학교를 가느냐 또는 인문계 고교를 가느냐를 사실상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교사가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데 있다. 이런 시스템이 자리잡으면서 학생들은 일찌감치 자신의 진로를 정해 준비할 수 있고 기업도 미래의 재원을 미리 확보, 구미에 맞게 교육시킬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우리처럼 사교육이 끼어들 틈은 어디에도 없다. 청년실업도 스위스에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이런 스위스 제조 경쟁력이 세계 최고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결국 뿌리산업 경쟁력 향상과 산업현장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는 교육시스템과 연계해서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처방은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정부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어떻게 개선하고, 전체 교육시스템과 경쟁력 방안을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기능명장들의 현장 목소리다. 나라경제



박일근
한국일보 산업부 차장
ikpark@hk.co.kr

대한민국 ‘철강장인’ 키운다

합덕제철고등학교

합 덕제철고등학교(충남 당진군 합덕읍 소재)는 국내 유일의 철강 분야 마이스터고다. 여기서 말하는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일컫는 것으로 2008년 처음 국내 도입됐다. 합덕제철고는 2008년 10월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경쟁률은 4.3대 1. 모두 전국 상위 30% 안에 드는 학생들이다.

합덕제철고가 철강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받은 데는 당진지역의 산업적 특성이 적극 반영됐다. 당진에는 현대제철·동부제철 등 국내 유수의 철강업체들이 입지, 철강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다.

“철강은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철강산업이 얼마만큼 발전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국력, 경제력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우리 학교는 미래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을 이끌어 갈 기술영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충호 합덕제철고 교장(56세)의 설명이다. 현재 합덕제철고에선 철강기계과 4반, 철강자동화과 1반이 운영 중이다. 학교 설립 목적이 철강 분야 기술인 육성인 만큼 교육과정은 철저히 이에 맞춰져 있다. 현장학습, 현장견학은 필수고 산업체 맞춤수업도 계획하고 있다.

“현대제철·동부제철·동국제강·환영철강 등 업체 8곳과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들은 졸업 후에 이들 업체에 입사하게 될 겁니다.” 이충호 교장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만큼 책임감이 크다고 말한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졸업인증제다. 학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력·인성·체력·외국어·독서 등 다양한 부문에 인증기준을 두고 있다. 학력은 철강 분야 전공 자격증 6개 이상, 인성은 사회봉사 150시간 이상, 체력은 태권도 공인 2단, 외국어는 토익 700점, 독서는 100권 이상이 기준이다. 기준이 이렇게 높다 보니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정이 꽉 찼어 있다.

“우리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집에는



학생들이 유압장비를 다루는 실습을 하고 있다. 원 안은 이충호 교장

한 달에 두 번 가죠. 어린 학생들이 소화하기엔 힘든 일지만 미래 철강 마이스터를 꿈꾸기에 아주 열심히 합니다. 아마 10~20년쯤 후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철강 분야 핵심기능인으로서 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능명장 뿐 아니라 기업의 CTO(최고기술경영자)도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

정부는 현재 21개인 마이스터고를 앞으로 단계적으로 5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충호 교장은 마이스터고가 활성화되려면 학생들의 병역 문제와 교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취업 후 병역으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합니다. 또 학생과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선생님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승진가산점 등 획기적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현재 마이스터고는 전자·기계·조선 등 분야에 전국 21개교가 지정돼 있다. 정부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산업 관련 마이스터고 재학생을 현재 600명에서 2012년까지 1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나라경제

세계 최고의 기술력 갖춰야



지난 5월 6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생산기술연구원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송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의미한다.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은 제품의 형상을 제조하는 공정이며, 열처리·표면처리는 소재에 특수 기능을 부여하는 공정이다.

뿌리산업 '3G' (Great, Globality, Glory)로 거듭나야

뿌리산업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종 제품에 내재돼 우리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해왔다. 20세기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반도체·레이저·초전도체·LED에서 뿌리산업의 공정은 50% 이상이다.

이렇듯 중요한 산업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뿌리산업은

그동안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의 대명사로 불리며 사양산업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도요타의 리콜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뿌리산업이 흔들리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와 같은 인식에서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성장 위주 패러다임이 갖는 뿌리산업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뿌리산업 구조 고도화, 인력 공급 시스템 개선, 기업 경영여건 개선, 기술역량 강화 등을 통해 '3D'를 새로운 '3D' (Digital, Decent, Dynamic)로 바꾼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필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3G' (Great, Globality, Glory)를 주장하고 싶다. 뿌리산업은 지금까지 우리 제조업의 근간이었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도 여기에 달려 있다. 미래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동력 산업 중

뿌리산업이 바탕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뿌리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대책으로 시작은 했다고 본다. 단기의 가시적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대대손손 미래를 위한 국가 기반을 수립한다는 생각으로 3G를 생각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뿌리기업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필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육성이다. 뿌리산업체를 젊은 인재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대 학생들의 가장 큰 바람은 세계적인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지만 정작 4학년 2학기가 되면 취업의 불안감, 백수의 고통으로 고민하게 되고,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뿌리기업인 중소기업에 취업한다. 현실에 밀려 취업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한 곳에 오래 근무하는 학생이 별로 없다.

뿌리기술은 특별한 공식이나 형식 없이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쌓이는 지식이다. 세계적 명품은 모두 이런 뿌리기술에서 탄생했다. 개도국이 아무리 모방하려 해도 안되는 부분이다. 우리도 기능명장을 기르려면 젊고 우수한 인재가 뿌리산업에 모이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뿌리산업의 기술력을 키워야 한다. 세계 속에서 최고 품질로 인정 받는 원천기술 부품 소재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2004년 일본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의 원자료가 대지진에 의해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모두 방사전 누출을 우려할 때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OO회사의 자동차 트랜스미션 부품생산 공장이 지진 피해로 1~6개월간 생산이 중단된다. 당장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는 물론이고, GM·포드 등 많은 유럽 및 북미 자동차 산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이 회사의 재고가 바닥나면 모든 자동차 생산라인은 멈춰야 한다.”

이 기사는 일본 부품업체의 세계적 위상을 보여준다. 일본이 제조업 강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세계 최고 품질의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2007년 9월 일본 동경 표면처리 전시회장에서 동경대 총장의 ‘모노즈쿠리’ 특별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최고 품질의 부품생산 및 환경,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대학 총장들이 이런 내용으로 국내 학회에서 강연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터라 매우 놀라웠다. 세계 최고 품질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난 4월 27일 제3회 일본 기술자 초청 기술지도 매칭 상담회가 열렸다. 이번 상담회는 한국기업이 도시바, 히타치, 도요타 등 일본 굴지 기업에서 근무했던 일본 기술자를 채용하는 행사다.

사랑하는 일본 중소기업 부품은 이런 총장의 자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뿌리산업 육성정책이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전시대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서도 안된다. 앞으로 100년 이상은 유지해야 할 국가 최고기술을 위한 정교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끝으로, 뿌리산업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뿌리산업체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다. 그러다 보니 업체수와 제품품목, 재정, 매출 등에 대한 조사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을 키워야 하는지 등을 알려면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사실 실태조사는 인력양성이나 원천 부품기술 개발보다 먼저다. 이번 기회에 6대 뿌리산업체 협회와 학회 12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서 나온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력 및 인력양성 체계를 갖춰야 한다.

21세기를 넘어 25세기까지 가야 할 우리 뿌리산업체의 기술력 및 인력양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체계가 갖춰지면, 뿌리산업은 정부의 지원 없이도 3G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우수한 기술자, 연구자가 나타나고 세계 속에서 독특한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부품 소재 생산 주머니 쇄도할 그날을 기대해 본다. 나라경제



이수완
선문대 전자재료공학과 교수
한국표면공학회장
swlee@sunmoon.ac.kr

그린은 플러스, 탄소는 마이너스

정부가 202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05년 대비 3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김 대리가 속한 환경경영전략팀 회의시간에도 '탄소 줄이기'가 주요 의제였다.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이 석유·석탄으로 대표되는 화석연료에서 나옵니다." 서진주 대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 팀장인 박 본부장과 팀원들을 보며 말을 꺼냈다.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산가스는 지구가 태양열을 방출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동안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대기 중 탄산가스 농도가 높아지면서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가 각종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 대리는 뚝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서 대리에게 감탄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채널(IPCC)은 인류가 매년 70억톤의 탄소를 공기 중에 뿜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지구의 허파 노릇을 하는 나무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은 무척 추웠잖아요. 심지어 '빙하기가 온다'는 말도 있던데..." 한 팀원의 말에 서 대리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것은 북반구 지역의 일이에요. 남반구인 호주는 40도가 넘는 유례없는 폭염에 고생했습니다. 지구 전체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기온이 인류가 온도를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답니다."

"저도 그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21세기가 끝날 때까지 기온이 6도 정도 더 오른대요. 이 경우 극지방 얼음은 모두 녹아버리고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해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김 대리가 서 대리의 말을 거들었다.

서 대리는 신이 나 더 자신 있게 발표를 이어갔다. "저는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린 플러스, 탄소 마이너스'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해야 하고요."

"탄소마일리지란 뭐죠?" 한 팀원이 물어보자 서 대리가 준비한 자료를 뒤적였다.

"탄소마일리지 제도는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 만큼 마일리지를 쌓아 현금이나 물건으로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장에서 탄소 저감 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상한다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탄소 줄이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탄소를 줄이면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팀장인 박 본부장도 덧붙였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9.3톤입니다. 이를 상쇄하려면 1인당 나무를 84그루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를 심거나 탄소를 줄이는 '그린 플러스, 탄소 마이너스'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부터 그리고 우리 부서, 우리 회사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서 대리가 마무리 말을 하자 박 본부장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관영



유복환 환경부 감사관

연세대, 캠퍼리지대 박사(경제정책 전공). 기획재정부에서 환경정책 등 주요 경제사회정책 기획과 조정업무를 수행했으며, 국내 첫 스토리텔링 환경경영 이야기책인 「그린 이즈 머니」(Green is money)를 썼다. bhyu7@hanmail.net

탄소 배출권과 배출권거래제

탄소 배출권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의무와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할당량만큼의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기업이나 국가가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여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것이다. 기후변화 협약인 교토의정서에 따라 각국에 부여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두기 위해 도입했다.

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 간 배출 권한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또한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것으로 배출 권한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만약 의무 감축량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면 해당 양만큼의 배출권을 다른 국가에 팔아 금전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탄소 배출권 거래는 대부분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정책 그 후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년

2008년 7월 1일, 노인수발을 사회가 부담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격 도입됐다.

취약한 복지인프라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고령사회에 대비할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반응한 결과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댄 상태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시행 2년을 맞이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나라경제'가 제도의 현황과 실적,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



함께하는 효도, 한결 가까워진 선진국

한 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고령화 사회는 이미 지난 2000년에 지났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세대가 채 지나기도 전에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렇게 빠른 노인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가족의 부양 의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건강과 복지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장기요양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기획단, 2003년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 2004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를 거치면서 기초연구가 수행됐고 실행모형이 만들어졌다. 2004년 8월부터는 실행모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고 2005년 7월부터 3년간 3차에 걸쳐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이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부법안으로 2006년 2월 ‘노인수발보험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논의를 거쳐 결국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돼 그 이듬해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른다. 전 국민 누구나 장기요양의 대상이 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말한다. 배설·목욕·식사·취사·조리·세탁·청소·간호·진료의 보조 또는 영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2010년 3월 말 현재 우리나라는 1~3등급 인정자 30

만명 중 약 23만명(78%)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시설 이용이 28%, 재가급여는 72%로 나타났다. 요양서비스 이용 비용은 1등급자 기준으로 요양시설의 경우 보험(공단: 120만원, 본인: 30만원)과 비보험(식재료비 등: 30만원)을 합해 월 180만원 정도다.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방문요양 시 약 100시간 기준으로 월 이용한도는 114만원이며, 이용한도까지 사용할 경우 약 17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표〉 요양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명)

	인정자	이용자			
		합계	시설급여	재가급여	가족요양
1등급	50,345	40,252 (100%)	20,148 (50.1%)	20,040 (49.8%)	64 (0.2%)
2등급	74,421	59,690 (100%)	28,711 (47.9%)	31,116 (51.9%)	133 (0.2%)
3등급	173,743	133,111 (100%)	16,439 (12.3%)	116,050 (87.2%)	622 (0.5%)
계	298,509	233,323 (100%)	65,298 (27.7%)	167,206 (72%)	819 (0.3%)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성과는 역시 삶의 질 측면에서 노인의 건강상태 호전을 들 수 있다. 요양인프라 구축 및 전문적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이나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 감소와 노인의 경제·사회 활동의 기회 증가도 요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요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제도시행 전 72만원에서 34만원으로 월평균 38만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수급자 범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인프라 확충, 보험재정 안정화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전문기들은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제도 운영에서의 공적인 리더십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보험인 동시에 가족을 위한 보험이죠”

김일열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도입TF팀 서기관(당시 요양보험제도와 근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등장한 배경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은 계속 증가하는데 가족에 의한 수발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실업·질병·은퇴 등 다른 사회적 위험과 같이 ‘노인요양’도 더 이상 개별 가정에서 책임질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제도를 만들 때 이견은 없었나?

공청회 때부터 시행시기, 대상자 범위, 재정부담 방식, 법 명칭, 장애인 포함 여부, 본인부담 수준, 지자체 역할,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센터 설치 등 많은 쟁점이 있었다. 제도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제도가 왜 필요한가?

가정에 치매나 중풍으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계시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보라. 금방 필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도 시행 전에는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나 고급 요양시설을 제외하고 서민을 위한 요양시설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양원이 많이 생겼고 가정에서도 요양보호사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어 가족들이 여유를 갖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을 위한 보험이면서 또한 그 가족을 위한 보험이다. 당사자인 노인은 품위를 유지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주된 수발자인 가족들은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었다. 현재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약 24만명에 달한다.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졌다. 요양시설 3천개 이상, 재가시설 1만개 이상이 설치됐다. 효과 측면에서도 실제 어르신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도 줄었다. 요양보호사 일자리도 10만개 이상 창



출돼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과제도 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중증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상자를 더 늘려야 하고 서비스 수준도 높여야 한다.

시행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 조정, 언론과 전문가의 비판과 부정적 여론 등도 어려웠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제도 시행을 준

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국회를 통과한 것이 2007년 4월이고 불과 1년 후인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가 시작됐다. 그 1년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새롭게 만들고 신청과 접수, 대상자 선정, 급여 이용과 급여비 지급 등과 관련된 구체적 실행지침을 준비해야 했다. 건강보험공단 실무자들의 교육까지 시켰다.

제도 시행 2년이다. 어떻게 평가하나?

제도 시행 전 전체 노인 중 3%를 위해 전국민에게 보험료를 걷어야 하는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인프라도 없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말인가 등등의 물음이 있었다. 고령화 대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부담은 나중에 급격히 커진다. 장기요양 수급자만 보더라도 노인의 3%는 2년 만에 벌써 6%가 됐고 조만간 1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초기에 제도를 만들고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세계 어느 나라의 제도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우리나라에 꼭 맞는 제도이며,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모범으로 삼기에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리경제

“몸 아픈 어르신 마음까지 챙겨요”

서울 성동구 홍익동에 위치한 시립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전국 최초 실비(實費) 전문노인요양기관이다. 2005년 8월 16일 개원한 이래 중풍·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장기요양 1·2 등급 판정을 받으면 누구나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립 동부노인요양센터에 들어서자 분홍색 앞치마를 입은 자원봉사자 할아버지가 손님을 반긴다. 휠체어에 앉아 동화책을 보시는 할아버지, 오순도순 담소를 나누는 할머니들 모두 평온해 보인다.

이곳의 하루는 아침 6시 어르신들의 기상 후 양치·세안으로 시작된다. 개별 건강에 맞춰 준비된 아침식사 후 7시 30분부터 건강지킴이 간호사들이 2시간 간격으로 찾아와 상처치료, 주치의 처방전에 따른 투약 등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9시에는 복지사들이 어르신들을 상담하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한다. 간식시간은 아침 10시. 하루에 두 번이지만 때로는 식사시간보다 더 기다려 지신다.

10시 반에는 층별로 마련된 프로그램실에서 기능회복을 위한 각종 활동이 진행된다. 여가재활프로그램은 원예·미술·음악치료에서 키포공예·도자기공예·웃음치료 등 다양하다. 신체적 제약으로 침상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말벗서비스·독서치료·손마사지를 통해 삶에 활력을 드린다. 각 프로그램 이후에는 사회복지사의 진행 아래 전신체조 및 인지 훈련이 이뤄진다.

체조 후 꿀맛 점심시간은 12시. 1시까지 식사를 마친 후 전기온열·운동 등 재활치료를 통해 심신을 단련한다. 재활치료 이후 휴식을 취하고 5시 30분이면 저녁시간이다. 저녁식사 후 8시에는 세면·목욕 등 개별 위생서비스가 제공되고, 어르신들 방 곳곳에 불이 꺼지기 시작한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의 얼굴에 사

랑이 가득했다. 광금봉 사무국장은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가족에게 믿음을 드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내실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들에게 심리적·육체적 안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박지영 기자

현장인터뷰: 광금봉 시립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사무국장

“전문요양시설이지 치료시설이 아닙니다”



시립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어떤 곳인가?

치매·중풍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이다.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심리·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현재 296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고, 37명의 어르신들이 주야간보호서비스(day care service)를 이용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가?

치매나 중풍은 장기적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다. 제도 시행 이후 가족들의 부담과 비용이 줄어들면서 국가지원에 감사해 한다. 또 시설들이 많이 늘어 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시설들 간 서비스 경쟁도 나타나면서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전문요양시설이지 치료시설은 아니다. 하지만 병원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곤란할 때가 있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형제들끼리 의견충돌로 입소비를 미납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 우리 센터는 미납자가 거의 없지만 소규모 시설들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김슬나 나라경제 인턴기자

‘저보험료·저급여’ 방식 바뀌야

2008년 7월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출범 2년이 됐다. 평상시 보험료를 재원으로 노인시설에 수용돼 생활하거나 가정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보험제도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의 노인이 1~3등급의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은 보험료, 국고부담, 이용자의 본인부담으로 구성된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비율인데, 2010년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5.33%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6.87%를 곱한 금액, 즉 소득 대비 0.35%이다. 일본의 1%, 독일의 1.7%에 비해 작은 편이다. 이용자는 재가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본인부담으로 지불한다. 재가이용자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있어서 이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국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2009년 지급 상황을 살펴보면, 28만7천명이 1~3등급의 판정을 받았고 여성이 70.7%였다. 장기요양기관은 1만4,560개소로 요양보호사 19만명이 종사했다. 보험료는 총 1조2천억원, 세대당 월평균 3,120원이 부과됐다. 요양비로는 2조원, 1인당 월평균 56만4천원(재가 41만6천원, 시설 83만4천원)이 지불됐다.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의 상당수가 2008년 제도 시행 시점에 인정자로 유입됨에 따라 신규인정자는 하향 또는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재신청자는 등급외자의 기능상태 악화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년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제도화됐다는 점에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일시에 시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1970년대 이후 건강보험에서 얻은 경험과 인력의 활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2년의 성과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제도화됐다는 점에 있다.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 대한 철저한 분석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실 지난 2년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추진된 변화들도 제도의 성과에 포함돼야 한다. 요양시설과 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은 제도 도입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취했던 저보험료, 저급여 방식을 수정해 차츰 적정보험료, 적정급여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대상자 확대, 재활서비스 급여화, 배우자 수발 가정에 대한 현금수당 지불 등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의료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간극에서 생기는 의료 단절을 메우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일할 의욕을 높이기 위한 방안, 이용자 중심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구축작업도 시급하다. 미래경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tokyoparis@hanmail.net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작가인 알렉상드르 뒤마. 그에게는 뛰어난 문학적 자질을 갖춘 사생아가 있었다. 이름은 알렉상드르 뒤마 2세. 처음에 아버지 알렉상드르 뒤마는 이 아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아이들이 점점 더 문학적 재능을 발휘, 아버지 못지 않은 재능을 선보이자 아버지 뒤마는 마음을 바꾸게 된다. 아버지에게서 인정받은 뒤마 2세는 「동백꽃 아가씨」(La Dame aux Camélias)라는 문제작을 발표, 파리 문단의 총아로 떠오른다. 사실 이 「동백꽃 아가씨」는 뒤마 2세의 자전적 소설이다. 19세기 중반 파리 사교계의 실존했던 최고의 고급창부(Courtesan) 마리 뒤플레시와 한때 사귀었던 자신의 연애 경험이 작품 속에 녹아 있다.

16살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천애의 고아가 된 마리 뒤플레시(소설 속에서는 마르그리트)는 교양과 지성, 미모를 모두 갖추고 있었지만 결국 상류 사교계에서 몸을 파는 화류계 여성의 길을 걷게 된다. 마른 몸매의 이 아가씨는 당시 파리의 모든 남성이 원하는 여인이었다.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서 쇼팽과 함께 활약한 프란츠 리스트도 그녀와 사귀었다.

뒤마 2세의 원작 소설은 약 300페이지가량 되는데 앞의 100페이지가 그녀와 귀족 청년에 대한 묘사다. 소설은 마르그리트의 유품 경매로부터 시작한다. 여기에 작가가 화자로 등장, 평소에 눈인사는 하고 지냈던 그녀의 유품 경매에 관심을 보이고, 그녀가 한 청년으로부터 선물 받은 소설책 「마농레스코」를 경매를 통해 사들인다(절세의 미인인 마농레스코의 운명도 마르그리트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책 선물이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책을 마리에게 선물했던 청년이 나타나 책을 되사가겠다고 자신의 눈물 어린 연애담을 들려준다는 플롯 아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물론 작가는 청년에게 그 책을 되돌려줬고, 마리의 죽은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 하는 청년에게 동정심을 느껴 그녀가 묻힌 몽마르트 묘지에 가서 함께 이장을 한다.

하지만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달랐다. 오페라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원작소설과는 달리 생략과 축약이 많이 필요했다. 베르디는 앞부분 100페이지를 모



동백꽃 아가씨(椿姫)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주세페 베르디 (1813~1901)

두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1850년대 이탈리아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는 파리에 와 있었다. 물론 자신의 오페라 상연을 위한 준비도 있었지만 아내와 사별하고 주위 사람들의 눈을 피해 파리에서 자신의 비밀 애인인 소프라노 주세피나 스트레포니와 동거하고 있었다. 아내와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크게 미안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주세피나 스트레포니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여주인공 아비가일레로 출연했던 소프라노였다. 처음에는 일로 만났지만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신



1 비올레타와 알프레도 2 알렉산드르 뒤마 3 주세페 베르디



장일범
yoonbhum@me.com
음악평론가, KBS 클래식FM '장일범의 가정음악' DJ,
호암아트홀에서 열리는 '장일범의 클래식 카페' 진행자

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그녀에게 동지애를 넘어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이다. 파리에서 그녀와 밀애를 나누던 베르디는 어느 날 연극 '동백꽃 아가씨'를 보러 간다. 당시 이 연극의 인기는 선풍적이었다. 뒤마의 소설도 큰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당시 실제 존재했던 스타 고급창부 이야기를 이름만 바꿔 출판해 많은 남자들이 혹시 자신의 이야기가 써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함에 책을 사들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베스트셀러 소설은 다시 연극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소설 「동백꽃 아가씨」 역시 연극 '동백꽃 아가

씨'로 재탄생해 파리지엔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다. 베르디는 이 인기 높은 연극을 보면서 '이뤄질 수 없는 이 두 남녀의 사랑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라면서 감동해 눈물을 흘리게 된다. 베르디는 바로 오페라 작업에 착수했고 지금까지 신화·전설·문학·역사만을 논하던 베르디 오페라 역사상 최초로 사랑을 소재로 한 연애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쓰게 된다. 주인공인 마리의 이름은 비올레타로 청년의 이름은 알프레도로 바뀌었다. 그러나 1853년에 초연된 '라 트라비아타'는 안타깝게도 대실패로 돌아갔다. 베르디의 아름답고 효과적인 음악에도 불구하고 원래 깡마른 몸매였던 여주인공역을 엄청나게 비대한 몸매를 지닌 소프라노가 나와 폐병을 호소하고 콜록거리자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리고 만 것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 '라 트라비아타'는 세계 오페라 극장에서 가장 자주 상연되는 레퍼토리이자 한국에서 상연된 최초의 오페라(1948년 시공관)이기도 할 정도로 전 세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또한 소프라노에게는 여주인공 비올레타로 분하는 것이 꿈이라고 할 정도로 여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중흥무진 활약하며 청중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뒤마의 원작소설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단출하게 여주인공 마르그리트의 집에서 만나게 되는데 베르디 작품에서는 서곡이 끝나고 비올레타의 화려한 무도회에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비올레타와 알프레도가 만난다. 이때 원작에서 흐르는 음악은 베버의 '무도회에의 권유'를 피아노로 치는 것이지만 오페라 속에서는 그 유명한 '축배의 노래'(Brindisi)가 울려 퍼진다. 베르디는 당시 무도회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음악장르인 왈츠를 이 '축배의 노래'에 넣어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금까지 남자들의 사랑만 받아왔지 자신은 남자들에게 정을 준 적이 없었던 비올레타는 이 잘생긴 청년 알프레도에게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소리높여 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라 트라비아타' 그리고 뒤마 2세의 소설 '동백꽃 아가씨'의 주제, '사랑은 우주의 심장박동!' (Amore palpito del l'universo)이다. 디리

★ 2010년 『나라경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작지만 강한 기업'을 찾아갑니다. 규모는 작지만 알찬 기술력과 도전정신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히트 챔피언. 그들의 숨은 노력과 성공비결, 관련업계 동향까지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가능성과 저력을 점검해봅니다.

탄탄한 기술력으로 세계 무선모뎀 시장 선점

씨모텍 무선데이터 모뎀 제조 전문회사

매일 아침 KTX로 천안에서 서울까지 출근하는 김무선 씨.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미처 못한 아침잠을 자는 사람들 틈에서 무선 씨는 넷북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즐긴다. 주요 기사도 보고, 메일도 체크하고, 가끔은 쇼핑도 한다. 달리는 고속열차 안이지만 인터넷은 끊김이 없고 속도도 빠르다. 와이브로(WiBro)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곳도 문제없다. 무선 씨가 쓰고 있는 모뎀은 3세대(CDMA, WCDMA)와 4세대(WiBro, WiMAX) 이동통신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이다.

현 재 전세계 무선인터넷 시장은 3세대와 4세대가 혼재돼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4세대 이동통신인 와이브로이동하면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 휴대인터넷은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실시된다. 언제 어디서나 무선인터넷을 마음대로 즐기려면 모뎀이 있어야 한다. 3세대와 4세대 에 각각 적용되는 싱글모드 제품은 우리나라처럼 3세대와 4세대가 혼재돼 있는 곳에서는 불편하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해 듀얼모드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전세계 무선데이터 모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바로 씨모텍이다.

듀얼모드 무선데이터 모뎀 세계 최초 개발

씨모텍은 2002년 설립된 무선데이터 모뎀 제조 전문 회사다. 2003년 USB 타입의 데이터 모뎀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시장에 진출했다. 특히 씨모텍이 2008년 개발한 듀얼모드 모뎀은 전세계에서 유일하다. 글로벌 우수 기업들은 씨모텍보다 훨씬 늦은 올해 7월쯤 듀얼모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씨모텍은 기술에서 경쟁사 대비 2년 정도 앞서 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개발해 출시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김태성 씨모텍 대표(47세)의 말이다. 듀얼



김태성 씨모텍 대표

모드 모뎀인 씨모텍의 'DBDM'은 국내에서 와이브로가 처음 시작되면서 국내 이동통신사들 사이에서 제한된 아이디어다. 와이브로의 커버리지(통신가능구역)에 제한이 많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와이브로 단말기에 기존의 3세대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었다.

씨모텍은 듀얼모드 제품을 연구하던 차에 미국이 4세대 기술 와이브로를 지향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씨모텍

은 이때 발 빠르게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스프린트(Sprint)사에 듀얼모드 모뎀 기술 제안을 하게 된다. “이 분야는 제조업체가 구매자와 개발 초기단계부터 기능, 디자인, 판매일정 등에 있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합니다. 즉, 제조업체가 구매자에게 기술 제안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제품이 개발됩니다. 따라서 구매자인 통신사업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스프린트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죠.” 김 대표의 설명이다.

기술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씨모텍은 1년 만에 DBDM 개발에 성공한다. DBDM 개발은 씨모텍에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 DBDM 개발 전까진 호주가 가장 큰 시장이었다. 호주시장은 3세대이기 때문에 미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선 호주를 버려야 했다. 시장을 바꾸는 것은 기업에 모험이다. 당연히 매출감소가 뒤따랐다. 기업의 사활을 건 모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씨모텍은 2010년 상반기 900억원 매출을 기록해 창사 이래 최초로 올해 매출 1천억원 돌파가 예상된다. 전 세계 32개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시장은 씨모텍 전체 매출액의 64%를 차지한다. 특히 전체 매출액의 80%가 수출로 발생할 정도로 씨모텍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 “우리 회사는 R&D에 2009년 기준으로 매출액의 13%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약 10% 수준이죠. 인력도 R&D 인력이 더 많습니다. 전체 직원이 130명 정도인데 그중 R&D 분야가 약 70명입니다. 통신 분야는 특히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따라잡히고 말죠. 항상 긴장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시장 다각화 위해 총력 기울일 것”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선데이터 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고 경쟁도 치열하다. 음성서비스에 대한 사업마진율이 낮아지면서 이동통신사들은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가입자당 매출액)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통신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유선망이 워낙 발달해 무선통신망 수요가 다른 시장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선통신은 러시아나 미국,



USB형 DBDM 제품들

호주 등 땅이 넓어 유선망을 설치하기 힘든 국가에서 수요가 많았죠. 하지만 통신사 간 ARPU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우리가 만든 4세대 통신 표준인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다

양한 지원에 나섰다. 이동통신사들은 넷북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프로모션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무선통신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김 대표는 말한다.

“앞으로 이동통신망은 텔레매틱스(Telematics),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물류추적관리 등 M2M(Machine to Machine)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씨모텍은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대표는 우선 씨모텍의 대표 상품인 DBDM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소한의 전력으로 데이터 전송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또한 미국에서의 LTE(Long Term Evolution) 모뎀 상용화에 맞춰 내년 1분기 목표로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와이파이(WiFi; 무선접속장치)가 설치된 곳의 일정거리 안에서 초고속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통신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포터블 라우터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올해 최우선 과제를 ‘시장 다변화’로 정했다. 그 방안으로 M2M 시장의 다양성과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1차 타겟은 유럽이다. 유럽의 M2M 시장은 니치마켓(틈새시장)이지만 공급 물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미래가 밝다. 공격적인 영업으로 먼저 사업자를 회사로 초빙해 기술력과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음성과 데이터 시장이 포화된 일본 시장은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한 블루오션으로 M2M에 대한 기대가 높다. 7월 일본 이동통신사 NTT docomo 관계사에 1차 납품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틈새시장 발굴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나리경제]

‘모바일 엘도라도’ 시대 열렸다

무선통신 산업 동향

2010년은 다른 어느 때보다 국내 통신 시장의 지각변동 그리고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애플 아이폰이 상륙하면서 폐쇄적인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빗장을 풀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무선인터넷 환경도 ‘모바일 엘도라도’ 시대를 맞고 있다. 스마트폰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수익 패러다임을 음성에서 무

선데이터로 바꿔 놓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올해 국내 무선인터넷 성장률이 16.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선인터넷은 새로운 사업기회이자 통신인프라로 급부상했다. 모바일 엘도라도는 ‘단말서비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어지는 스마트폰 생태계를 조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2차 무선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4월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을 통한 제2의 인터넷 도약을 목표로 3차 중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를 비롯한 제조사, 콘텐츠 제공사업자 모두 무선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비즈니스에 열을 올리고 있다. SK텔레콤의 산업생산업 중대(IPPI), 통합LC텔레콤의 탈통신, KT의 스마트 전략도 같은 맥락이다. 스마트폰 확대도 무선인터넷 활성화의 한 축이다.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규모를 500만대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전체 휴대폰 시장규모 2,200만대의 20%를 웃도는 수치다. 스마트폰 열풍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Gar-



월드컵 기간 중 트위터, 동영상 생중계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무선인터넷 접속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한 한 통신사가 전국 11개 주요 응원 장소에서 다양한 홍보활동과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모바일 비즈니스에 열을 올리고 있다.

tner)는 오는 2012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규모가 2008년보다 세 배 이상 성장한 4억 9,190만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각 시장조사기관과 관련 업체는 무선인터넷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방통위 형태근 상임위원은 “이통사의 무선인터넷 매출 비중을 3년 안에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

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여전히 높은 스마트폰 요금제는 무선인터넷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정액제에 가입했더라도 통신료가 겁나 손쉽게 인터넷 접속을 하지 못한다. 이통사업자가 앞다퉈 요금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정 사용량을 넘으면 데이터 요금이 천정부지로 뛰어 오른다. 이 때문에 ‘반쪽짜리’ 요금제라며 외면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고객 가치를 높일 비즈니스 모델 부재도 풀어야 할 숙제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용자에게 꼭 맞는 콘텐츠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이통사, 제조사,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여기에 무선광대역 인터넷망 기반 수요창출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리
경
제



김동석
전자신문 모바일팀장
dskim@etnews.co.kr

한국인 정체성의 뒷모습

‘체념한 자포형’

‘인정과 자기확신을 얻고자 완벽을 추구하는 한국인.’ 어떤 외신기자가 성형미인 열풍이 부는 한국인의 모습을 정의한 표현이다. 사회적 인정에 대한 열망은 단지 얼굴이나 신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좋은 부모가 되려 하고, 본인이나 자식에게는 최고의 교육과 학벌을 갖추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다. 여기에 최고의 직장은 필수이다.

‘남들 보기에 최고를 지향하는’ 한국인의 정체성은 모두가 멋지고 최고의 인물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의 조건이라는 벽에 부딪힌다. 이런 삶의 모습은 현실적으로 최고의 스펙을 갖춰 입사 시험에서 성공하려는 대학생에게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좋은 스펙이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보면 뛰어난 모습이지만, 구체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초점을 두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들이 찾는 또는 원하는 인재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나 차이는 취업뿐 아니라 자녀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부모,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맨, 안정된 미래를 설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우리의 삶이 자신의 예상과 다를 때, 또는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것이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 한국인이 막연히 가지는 ‘멋진 보통사람’의 정체성은 급변한다. 결코 자신의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체념한 자포형’의 모습이 나타난다.

‘멋진 보통사람’으로 보이는 한국인의 정체성이 조직에서 일하는 참신한 신입사원이나 열정 있는 중간간부를 연상시킨다면, ‘체념한 자포형’은 구태의연한 샐러리맨이나 공무원의 모습이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술·담배에 찌들어 현실의 고통을 삼키려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삶의 풍요로움을 즐기기보다는 일에 치여 살면서, 스스로 만들어 낸 부담과 책임감 속에서 폐쇄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남을 의식하고 또 남들에게 잘 보이려 하지만 정작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자신의 삶에서 수동적일 뿐 아니라 일에 대한 뚜렷한 책임감도 없다. 때로는 과거 방식을 아둔하게 유지하려는 고집도 보인다.

그렇다고 스스로 자신의 성향이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복권이 당첨되거나 귀인을 만나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다.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낼 뿐 아니라 체념에도 익숙하다. 때로는 폐쇄적이고, 혼자서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오타쿠적 성향도 있다. 충동적이며, 일상 생활에서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감정의 날을 세우기도 한다. 마땅히 즐기는 취미도 없고 단지 술을 가까이 할 뿐이다.

한국인의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 꼭 언급하게 되는 삶의 불안과 낮은 자존감이 바로 ‘체념한 자포형’의 심리코드이다. 자기의 것을 지키려 하거나 또는 이해관계에 민감하다. 우리 사회의 정치나 일상의 어두운 면을 지배하는 한국인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정체성의 이미지이다. 언론이나 조직이 위기를 강조하고, 또 자신이 아닌 남들에게 계몽적인 생각을 강요할 때 쉽게 사용하는 심리코드이다. 이런 심리코드는 ‘이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또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학습된 무력감의 심리를 반영한다.

나라경제

‘체념한 자포형’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술·담배에 찌들어
현실의 고통을 삼키려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삶의 풍요로움을
즐기기보다는 일에 치여
살면서, 스스로 만들어 낸
부담과 책임감 속에서
폐쇄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남을 의식하고
또 남들에게 잘 보이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



황상민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심리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국내 소비자 심리학 분야의 권위자다. 저서로는 「디지털 과파: 미래 소비를 결정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대통령」, 「대한민국 사이버 신인류」, 「너 지금 컴퓨터로 뭐하니」 등이 있다.
swhang@yonsei.ac.kr

‘베이비부머 O씨’ 일대기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일대기를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해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는 젊은 세대보다 철저한 자산관리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 6월 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생애재무설계 박람회에서 한 참석자가 전문가와 상담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직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산 붐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2010년 현재 약 712만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한다.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은퇴는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비붐 세대를 대표하는 가상인물 O씨의 일대기를 통계로 조망해 봄으로써 베이비부머들의 인생궤적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 보자.

동란 이후 격변기 살아낸 한국경제 성장의 주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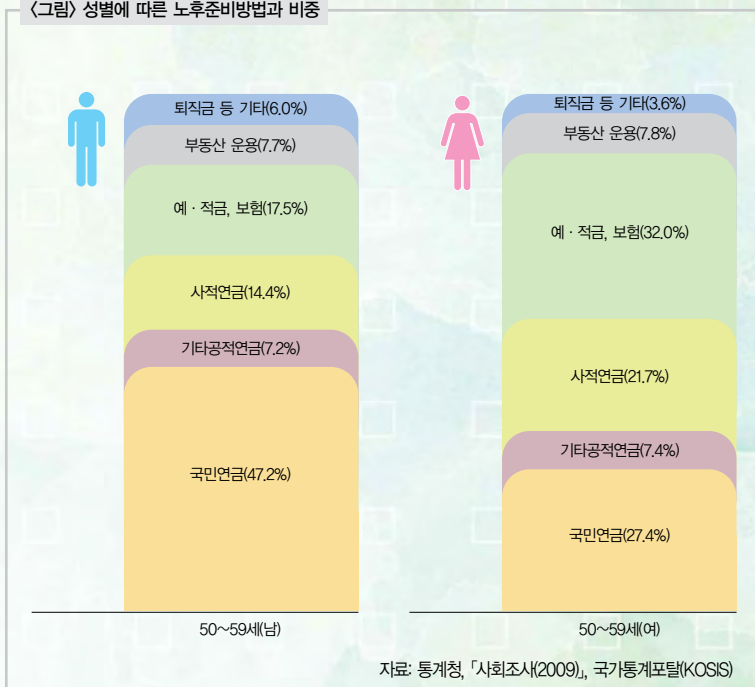
1960년 농촌의 한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올해로 만 50세가 된 베이비부머 O씨. 가난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학교를 다녔고 친구들과 자치기, 구슬치기를 하며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가 태어난 1960년 당시 출생아 수는 지금보다 약 2.3배 많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의 어린 시절은 물질적 풍요와는 거리가 멀었다. O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1967년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64.8명. 지난해 학급당 학생 수(27.8명)와 비교하면 ‘콩나물시루’ 교실이라 부르던 것이 이해가 된다.

O씨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무렵에는 중학교 무시험 입학과 고교평준화로 인해 ‘뽕뽕이’라는 말이 생겼고, 사교육비의 원천인 학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부모님이 기르던 소까지 팔아 등록금을 마련해주신 덕분에 O씨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대부분 대졸 학력인 요즘 젊은이들에겐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1979년 당시 남녀 각각 29.2%, 20.7%였던 대학진학률은 2009년 81.6%, 82.4%로 증가했다. 졸업률

앞둔 O씨. 건설업, 도소매업 쪽으로 취직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제조업체로 가는 친구들의 수도 많아 고민이다.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은 1986년 당시 50.5%에서 2009년 76.6%로 크게 증가했다.

O씨 나이 서른 즈음. 집안에서는 결혼하라고 성화! 이 나이를 후배들은 노총각·노처녀라 부르는 눈치다. 요새는 남자 31.6세, 여자 28.7세로 결혼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 당시는 남자 27.8세, 여자 24.8세이면 결혼하는 분위기였다. 또 O씨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주위에 4~5남매는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다들 1명씩만 낳으려 한다.

〈그림〉 성별에 따른 노후준비방법과 비중



통계, 미래를 내다보는 나침반!

경제성장의 주역인 '산업일꾼'으로 불리면서까지 열심히 일한 O씨. 40대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O씨는 무엇보다 일이 우선이었다. 지금이야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근로시간이 단축돼 여가활동을 찾고 있지만 2000년 월평균 근로시간이 208.8시간(2008년 189.3시간)이었던 시절에는 여유가 없었다.

2010년 현재 50세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O씨.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나 앞으로 30년 이상 더 살아야 하는데,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시간은 대략 3~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매일 매일 O씨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그동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위로는 부모 생활비, 밑으로는 자식 교육비 등을 모두 부양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정작 본인을 위한 노후 준비에는 소홀하다 보니 불안하기만 하다.

가계의 주된 수입원으로 왕성한 소비와 생산 활동을 했으나 O씨의 대부분 자산은 부동산에 집중(79.8%)돼 있다 보니 막상 쓸 돈은 부족하다. 현재 O씨와 같은 연령대 사람들의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남성이 국민연금(47.2%), 여성이 예금·적금·보험(32.0%)이다. 불안한 노후를 극복하기 위해 O씨는 정년퇴직 후에도 일을 하려 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노인부양 부

담이 증가하는 만큼 자신의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서다.

선배세대인 고령층(55~79세) 가운데 향후 취업 희망자는 57.6%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된 취업희망 이유로 남녀 모두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를 1위로 꼽았다. 고도의 경제 성장을 겪으며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넘긴 베이비붐 세대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베이비부머 O씨의 일대기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통계는 단순한 숫자나 수량적 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용한 지식이자 생활의 도구이다. 과거와 현재가 어떤 모습이고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통계가 국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침반



박병선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사무관
bspark77@korea.kr

가장 큰 투자엔진은 자신의 직업

부 동산에 편중돼 있는 자산보유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융자산, 그중에서도 투자성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면 묘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많다. ‘아, 드디어 저 사람의 본색이 나타나는구나. 누가 증권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랄까봐 결국은 주식투자를 하라는 이야기구나.’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결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오히려 일반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단기간에 샀다, 팔았다 하는 방법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국제화되면서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이 너무나 복잡해졌을 뿐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일반투자자들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해 사고파는 결단을 내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업에서 얻는 수입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라

기름 주식에 투자해서 재산을 몇 배 불렸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보고 ‘나라고 못할쏘냐’며 달려드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재산을 몇 배 불린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직접투자로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전업투자자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들의 흉내를 내게 되면 본업에 소홀하기 쉽다.

필자는 40년 가까이 증권업계에 종사해 오면서 본업인 직업을 소홀히 하고 부업인 재테크를 쫓아다니는 사람을 자주 봐 왔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재테크에서 실패할 뿐 아니라 자신의 직업에서도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개인투자자의 가장 유력한 수입원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다. 즉,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엔진은 자신의 본업으로부터 얻는 수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는 투자대상을 구성할 때 본업에서 얻는 수입을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근무하는 직장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급여와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보너스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직장인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만큼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금융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산운용은 어디까지나 부업이다. 자신의 직업에서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은 게을리 하면서 주식투자에만 열중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자산운용에 성공할 수 없다. 주식투자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가장 수익성이 높은 자산을



썩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투자는 협의의 자산투자와 인적자본투자로 나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이를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그것은 협의의 자산투자이다. 그러나 이 자금을 어학이나 또 다른 전문지식을 배워 몸값을 높이는 데 쓴다면 이는 인적자본투자이다.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젊은 세대의 경우, 장래의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인 자기 자신을 연마하는 데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주식투자에 열중하는 것보다는 어학이나 비즈니스 공부를 하는 것이 장래에 더 큰 수익(return)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직장인은 돈을 버는 능력을 지닌 자기 자신도 운용자산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현재 및 장래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것을 인적자본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운용자산은 이 인적자본과 협의의 운용자산을 종합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젊은 세대가 금융자산에 투자할 경우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와 같이 투자 위험도가 높은 자산의 비율을 높게 하는 것은 인적자본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만한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반면 노년층으로 갈수록 인적자본은 축소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제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즉 인적자본에서 협의의 운용자산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자연히 협의의 자산 투자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투자의 왕도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

개인투자자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곧 바로 같은 직업을 찾아 현재 수준 못지않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개인투자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 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거나, "언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산운용을 해서 재산을 늘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투자에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 즉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일에서 일류가 되겠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 맡은 일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자신이 없다면 회사에 부탁해 업무를 바꾼든지, 아니면 전직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능력을 키워 보다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투자의 왕도이다. 개인투자자의 가장 큰 재산은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얻는 수입으로 충분히 생활해 나갈 수 있다' 는 자신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직장인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인적자본 투자를 위해서든,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든, 투자는 투자전문가에게 맡기고 자신은 가장 큰 투자엔진인 자신의 직업에 충실해야 한다. 미래경제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장래의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인 자기 자신을 연마하는 데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능력을 키워 보다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투자의 왕도이다.



강창희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장

지난 36년 동안 대우증권 동경사무소장, 국제본부장, 리서치본부장, 현대투신운용 대표, 국모닝투신운용 대표 등을 거치면서 은퇴 및 투자 교육의 개척자 역할을 해왔다. 저서로 「직장인의 노후설계와 퇴직연금」, 「당당한 인생후반 30년을 결정하는 자산관리의 원칙」 등이 있다. chkang@miraeasset.com

OECD, “韓경제, 금리 정상화 시작해야”

KDI, 「OECD 한국경제보고서」 세미나



KDI는 지난 6월 16일 「2010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간에 맞춰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랜달 존스(Randall Jones) OECD 사무국 한국담당관과 각 분야별로 초청된 학계·정부·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현오석 KDI 원장의 개회사로 막을 연 이번 세미나는 거시경제 전망 및 정책 방향, 금융정책, 보건의료정책, 녹색성장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랜달 존스 OECD 사무국 한국담당관의 보고서 내용 발표 후 각 세션별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현 원장은 개회사에서 “OECD는 정기적으로 한국경제의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구조적 이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면서, “2010년 보고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번 세미나가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세션에서는 한국의 거시경제 전망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랜달 존스는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정 경기부양책을 실행했고, 수출 주도로 경제위기에서 가장 빠른 회복을 달성”했으며, 향후 2011년까지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중기적으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 및 노동 참여를 제고가 필요한데 특히 서비스 분야에 경쟁 및 R&D를 강화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강조하는 임금제도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을 한국은행의 목표범위인 2~4%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토론에서 “아직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신중한 거시경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나치게 빠른 출구전략은 위험해 더 넓은 맥락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세션은 ‘금융정책’을 다루었다. 랜달 존스는 “금융 부문 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지출 규모가 2009년 급격히 증가해 이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지원 규모를 줄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중소기업 지원금융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랜달 존스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에 최훈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지원관련 기존 조치를 회수해야 한다는 데 대해 정부도 이견이 없다”며,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일정대로 지원조치를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세션은 보건의료정책을 주제로 보건의료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랜달 존스는 “한국은 의료지출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억제해 왔지만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빠른 인구 고령화로 지속적인 상승 압력이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 증가 억제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지출의 효율적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사회보험료보다 좀 더 기반이 넓은 조세수입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비 중 본인 부담이 높은 한국의 현실을 지적하며 “환자 진료성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의사 수 증가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재원 확충을 간접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OECD의 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세금과 관련해서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 수 확대에 대한 OECD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있었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진료비 시스템 개선 이후 의사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노길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인력 규모는 국가별 특수성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은 ‘녹색성장 촉진 및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주제로 했다. 랜달 존스는 “한국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구축 및 탄소세 도입이 과제”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 비중이 큰 나라이므로 저탄소 산업으로 이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이 2013년까지 매년 GDP 2%의 재정을 투입하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데 대해서는 “1990년대 말 정부가 벤처산업 활성화를 시도했을 때처럼 버블을 형성할 수도 있다”며, “기초 R&D와 제도환경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최창원 녹색성장기획단 국장은 녹색버블에 대한 OECD의 우려에 대해 “한국은 녹색인증제를 엄격히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IT 붐과 녹색성장은 다른 측면이 많아 동일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었다_ 갯벌(강화도 동막 해변, 전남 신안 증도)



A photograph of three children playing in the shallow ocean. One child in a black swimsuit is in the background, while two others, a girl in a white shirt and pink shorts and a boy in a white and green shirt and khaki pants, are in the foreground. The water is calm, and the sky is a pale blue. Several small, stylized brown birds are scattered across the right side of the image. The title text is overlaid on the lower half of the image.

생태계의 자궁 속을 걷다

개러프 서프

바람은 습하고 비릿하다. 숨을 쉴 때마다 갯것들의 사는 냄새가 난다. 소금에 절인 듯 짭짤한 아침 공기. 갈매기들의 끄억거리는 소리. 서서히 안개가 걷히자 갯벌은 한껏 바다를 드러내고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한다. 바다를 싱싱하게 하는 갯것들의 무수한 숨구멍들. 갯벌이란 살아있는 것들의 축복 받은 생명밭이다. 기고, 튀어나오고, 숨고, 먹고 먹히는, 삶의 전쟁과 휴식을 동시에 치러내는 날것들의 터전이다. 생태계의 자궁이다. 물고기에게는 산란처이자 은신처이며, 새들에게는 급식창고이고, 사람에게는 생계의 밭이다. 무엇보다 그것의 심미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다.

강화 남단 동막 해변에서 나는 그것을 본다. 끝도 없이 펼쳐진 갯벌과 갯것의 비릿한 삶을. 갯벌에는 뿌리지도 않은 갯것들이 차고 넘친다. 가무잡잡한 가무락(모시조개)도 있고, 희고 누런 동죽과 소라도 있다. 고둥과 게는 너무 흔해 빠졌다. 늪은 어부는 해를 등지고 망둥이 낚시를 던진다. 망둥이 낚시가 시원찮으면 잠시 낚싯대를 거두고 굴도 파고 고둥도 줍는다. 구불구불한 갯벌의 물골에는 금은빛으로 반짝이는 서해비단고둥이 지천이다. 건드리면 시치미 툽 떼고 죽은 척하는 밤게도 물골을 거슬러 오른다. 밤게 이 녀석 참 재미있게 생겼다. 몸뚱이는 알밤처럼 둥그렇고 매끈하며, 다른 발에 비해 집게발이 유난히 크다. 밤게는 게가 옆으로 걷는다는 상식을 무시한다. 집게발을 비스듬히 쳐들고 앞으로 느릿느릿 걸어가는 것이다. 그것도 너무 느리게 걸어서 답답할 정도로.

갯벌의 차고 넘치는 갯것은 새들에게도 긴요한 먹이 노릇을 한다. 드넓은 갯벌을 두고 한쪽에서는 사람이, 한쪽에서는 새들이 부지런히 갯일을 한다. 새들에게는 강화 남단 갯벌이 행복한 곳간이요, 평화로운 낙원이다. 이곳이 세계적인 희귀조류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번식지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오래 전, 강화갯벌에서 우연히 저어새를 본 적이 있다. 망원렌즈로 갯벌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무언가 바지런히 움직이는 게 보였다. 저어새였다. 먼 갯벌에서 녀석들은 주걱 같은 부리로 갯벌을 열심히 휘저으며 갯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따금 셔터를 누르며 갯벌에서 빈둥거렸다. 갯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녀석은 오로지 나밖에 없었다. 나는 그것을 즐겼다. 갯벌을 따라 거닐며, 갯벌만큼이나 질척하고 더딘 시간을.

갯벌이 차지고 웅골차기로는 전라남도 신안 증도(曾島) 갯벌도 남부럽지 않다. 버지 포구에 내려 병풍도 쪽을 보면 입이 딱 벌





어질 만큼 멋진 갯벌이 펼쳐진다. 우전리에서 화도 쪽을 봐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 갯벌에 반해 두 번이나 증도 여행을 다녀왔다. 증도 갯벌의 매력은 갯벌을 배경으로 자리한 소금밭에 있다. 이곳에는 가장 큰 태평염전을 비롯해 돌마지 염전, 덕정염전 등 곳곳에 거대한 염전지대가 포진해 있다. 증도를 소금섬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기 염전이 수십 년 다른 데는 물소금 짜깍으라도(간수를 빼내지 않은 소금) 막 실어나가는데, 여기 소금은 안 그러요. 깨끗하고, 꼬실꼬실하고, 물이 질질 흘러지 않고, 쓴물이 쏙 빠지면 나가니까 여 소금을 알아주지라.” 20년 넘게 소금밭에서 짬뽕까나 왔다는 어느 소금꾼의 말이다. 소금밭이야말로 하늘과 동업하는 일이다. 별도 좋아야 하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야 꼬슬한 소금이 나온다.

증도에는 염전이 많은 만큼 폐염전도 많다. 폐염전은 이제 붉은 칠면초 무리와 갯썩부쟁이 꽃밭으로 변했다. 해풍이 불어올 때마다 꽃밭에는 바람결을 따라 꽃물결이인다. 이 모습을 멀리서 보노라면 마치 꽃사태가 난 듯 황홀하다. 누가 일부러 가꾸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꽃밭을 일구어 놓았다. 여러 섬을 다녀보았지만, 이런 갯가 꽃밭은 처음이다.

갯가 소금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려면 해질녘이 제격이다. 저녁놀이 붉게 물든 하늘은 고스란히 소금밭에 내려앉는다. 갯벌은 갯벌대로 붉게 물들고, 바다는 바다대로 저물면서 빛난다. 갯가 소금밭에는 늦게까지 일을 끝내지 않은 소금꾼이 홀로 남아 황혼 속에서 소금 대패질을 한다. 붉은 노을 속에서 소금 수레가 빠져나온다. 해가 다 저서 캄캄해질 때까지 소금꾼은 홀로 소금을 거두며 그렇게 어두워진다. 나와 함께

글 이용한 시인, 작가

‘길 위의 시인’으로 지난 13년간 국내외 오지 혹은 섬을 떠돌며 글을 써왔다. 1995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수상했다. 시집 『안녕, 후두둑 씨』, 『정신은 아프다』, 여행에세이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갈: 티베트 차마고도를 따라가다』, 『바람의 여행자: 길 위에서 받아 적은 몽골』 등을 펴냈다.

『나라경제』

독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조사기간 _ 2010년 6월 8일~11일(4일간)

조사대상 _ 『나라경제』 유상·무상 독자 232명

조사방법 _ 전화조사

조사기관 _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여론조사팀

2010년도 『나라경제』는 지난해보다 경제기사의 비중을 늘리고 새로운 칼럼을 신설하는 등 일부 코너를 개편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는 총 232명으로 유상독자 82명, 무상독자 150명이었으며, 무상독자 중에는 교수, 연구원, 기업·금융인, 공무원, 일반국민을 각각 30명 선정했다. 각 질문에 대한 빈도를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만 언급했다.

◎ 특집·해설·이슈에 관심 높아

- 첫 번째로 독해정도를 묻는 질문에 '관심 있는 기사 위주로 읽는다'는 답변이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부분의 기사를 꼼꼼히 읽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19.8%, '대충 훑어본다'는 응답이 13.8%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사를 꼼꼼히 읽는다	관심 있는 기사 위주로 읽는다	대충 훑어본다
19.8%	66.4%	13.8%

- 그렇다면 관심 있게 읽는 코너가 무엇인지, 개방형 복수응답으로 답변을 들었다. '특집' 기사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35.8%를 나타내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으며, '이달의 이슈', '경제정책해설'이 각각 21.1%를 차지했다. 또 '인터뷰' 13.8%, '집중토론' 10.3%, '정책 그 후'가 9.9%순으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경제정책해설' 코너에 대한 관심이 높긴 했으나 2010년 들어 '이달의 이슈'와 동일한 비율을 기록한 것은 해설 지면에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2009년 시작된 이후 독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얻고 있는 '정책 그 후'(9.9%)도 주목할 만하다. 신설된 코너인 '세계는 지금'(5.6%), '생애설계와 자산관리'(5.6%)도 선전하고 있다. 기타에 포함된 답변 내용으로는 '주제별로 다르다', '관심 있는 기사순으로 읽는다', '전반적으로 읽는다' 등이 있었다.

특집	경제정책해설	이달의 이슈	인터뷰	집중토론	연중기획
35.8%	21.1%	21.1%	13.8%	10.3%	2.6%
세계는 지금	생애설계 자산관리	시평	정책 그 후	그들은 바쁘다	마음 들여다보기
5.6%	5.6%	3.0%	9.9%	3.9%	1.7%
클래식 카페	통계로 본 나라경제	나라 밖 경제	외선이 본 나라경제	생각인남	기타
2.2%	0.9%	6.0%	3.9%	6.0%	5.6%

◎ 응답자 80% 이상이 "시의성·전문성 있다"

- 기사의 시의성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응답이 82.3%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직군별 차이도 거의 없어 상당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27.2%	55.2%	15.9%	1.7%

- 기사의 전문성 부문도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1.6%, '그렇다'는 응답이 59.5%에 달해 81.0%의 독자가 『나라경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국민군 중에서는 96.7%가 『나라경제』가 전문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교수집단군에서는 70.0%가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30.0%를 차지해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21.6%	59.5%	18.5%	0.4%

◎ 기사 흥미성, 전문직군에서 상대적으로 저조

• 기사의 흥미에 대한 응답으로는 '흥미롭다'는 응답이 47.4%로 가장 높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6.7%를 차지했다. '매우 그렇다'는 답변도 11.6%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국민군(무상)이 기사에 '매우 흥미를 느낀다'는 응답(20.0%)이 연구원·기업인·공무원 등의 응답(6.7%)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보인 직군이 기업·금융인에서 53.3%로 가장 많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연구원' 집단도 10%를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눈에 띈다. 이는 전문가 집단보다는 일반 대중들에게 『나라경제』 기사가 전문적으로 비춰질 뿐만 아니라 흥미롭다는 것으로, 『나라경제』가 독자와 어떻게 눈높이를 맞춰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6%	47.4%	36.2%	4.3%	0.4%

• 『나라경제』의 디자인이 적절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48.3%가 '그렇다'고 답했고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도 23.7%로 나타났다.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이 다수를 이뤘지만, 『나라경제』는 다양화된 매체 환경을 고려해 오프라인상 디자인뿐 아니라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의 디자인에도 사용자 위주의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나갈 예정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25.4%	48.3%	23.7%	2.6%

◎ 정책해설 추가 취재 “도움 된다”

• 『나라경제』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했다. 하나는 '학습 또는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였고, 또 하나는 '경제정책해설란의 추가정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였다. 학습이나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매우 그렇다'가 23.3%, '그렇다'가 55.2%로 나타났다. 특히 기사를 꼼꼼히 읽는 독자일수록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았다. 독자들은 흥미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나라경제』를 구독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나라경제』는 올해부터 경제정책해설의 비중을 늘린 한편, 보도자료 수준의 해설에서 벗어나고자 추가 취재를 통한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묻자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업무나 학업에 있어 도움 정도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응답
23.3%	55.2%	19.4%	1.7%	0.4%

• 경제정책 해설란의 도움 정도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응답
15.9%	55.2%	25.4%	1.7%	0.4%	1.3%

◎ “국내외 경제동향·전망 강화하길”

• 『나라경제』가 앞으로 강화했으면 하는 부분을 복수응답으로 물어본 결과 국내외 경제동향과 전망이 65.5%, 재테크 등 경제상식과 이론에 대한 답변이 34.5%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국민군의 경우 63.3%가 재테크 등 경제상식과 이론을 선택한 반면, 기업·금융인, 공무원군의 80.0%가 국내외 경제동향과 전망을 답한 것은 직군별 독자들의 선호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앞으로 차별화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사 작성 및 제작에 방향성을 제시한다.

정부경제정책	국내외 경제동향과 전망	재테크 등 경제상식과 이론	서평, 에세이 등 문화칼럼	기타	무응답
41.4%	65.5%	34.5%	17.7%	1.3%	0.4%

◎ 전반적으로 만족…“다소 지루하다”

• 시의성, 전문성, 흥미 및 디자인, 기능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답변을 들어본 후 마지막으로 『나라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물었다. '만족'한다는 의견이 80.2%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개방형 질문으로 해본 결과 '업무나 학업에 도움되는 정보를 준다', '경제동향이나 정책을 심도 있게 알 수 있다',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발행해 신뢰가 간다', '국가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알 수 있다', '다양한 현안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놔다'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그러나 '내용과 주제는 만족하나 너무 전문적이다'라거나 '다소 지루한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12.9%	67.2%	18.1%	1.7%

◎ 독자참여 기회 늘려야

• 끝으로, 『나라경제』 독자들에게 자유롭게 바라는 점을 물었다. 모처럼 독자와 전화로 대면한 덕분인지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늘려 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사', '다양한 볼거리와 흥미로운 소재'에 대한 요청도 많았다. 또 '정부 정책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를 이뤘다.

• 이번 조사를 통해 『나라경제』 편집팀은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해주신 답변들은 가능한 한 이달 이후부터 편집·제작 시 적극 반영하고, 미진한 부분은 다음 개편 때 검토할 계획이다.

『나라경제』는 독자 여러분들에 의해 비로소 완성된다. 앞으로도 많은 충고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 걱정할 때 아니다

최 근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부동산 가격거품 붕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과연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고, 거품이 붕괴되면서 엄청난 파급효과를 초래할까?

거품론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거품을 이야기하고 그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이다. 가격거품은 어떤 자산의 가격이 내재가치보다 크고, 그 차이가 더 커질 때 내재가치와 시장가격의 차이를 지칭한다. 시장가격이 변동하면 그 이유가 거품 때문인지 내재가치 때문인지 구분해야 한다. 예컨대 이자율이 낮아지면 내재가치가 커져 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늘면 내재가치가 작아져 가격이 내린다.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거품이 자란다고 하고, 반대의 경우 거품이 꺼진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두 번째 문제는 정확한 의미의 거품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선 주택은 고가의 자산이다. 거품이 자란다면 거래단위가 더 커지는데 이를 자기 돈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투자자금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거품이 자라지 못한다. 1980년대의 일본, 최근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타 금융규제로 인해 거품성장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없었다.

둘째, 거품은 가격상승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속에서 자라지만, 높은 가격에 주택을 사는 사람은 불안하다. 이 불안 때문에 거품은 외부충격에 취약하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때 수십 차례 강력한 규제가 가해졌고 곧이어 세계적 금융위기라는 큰 충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거품을 부정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셋째,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난 20여년의 긴 기간을 두고 보면 전국 주택가격지수는 연평균 4.27% 올라 물가상승률(4.61%)보다 낮았다. 서울의 아파트만 골라서 보면 연평균 8.18% 올라 물가상승률을 크게 초과한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도 근로자 가계소득 증가율(10.27%)에 미치지 못한다. 또 이 수치들은 우리나라 주택이 질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을 반영하지 않는다.

2003년 이후, 지역별 시장들은 크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방시장은 미분양 사태로 침체됐고, 신규 공급이 거의 중단되는 과정을 거쳐 간신히 회생의 기미를 띠고 있다. 수도권 외곽 지역은 '옥석가리기'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서울 통근권 시장은 지난 5~6년간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이 뚜렷하지 않다. 이처럼 주택 시장에 여러 현상이 섞여 나타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거나 그렇지 않거나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넷째, 백보 양보해서 우리나라에 거품이 있다고 해도 이는 극히 한정된 지역의 이야기일 뿐이고, 주택대출의 LTV가 평균 50% 이하다. 집값이 폭락해도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 일본이나 미국의 예를 들어가며 거품붕괴와 금융위기, 경제침체의 악순환 구조도를 그리기는 쉽지만 우리나라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결국 일반적인 수요-공급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동산 가격거품이 우리 주택시장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택가격은 수급·금융규제·이자율 등 일반적인 수요-공급 요인에 따라 변한다. 현재와 같이 침체되기도 하지만,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낙관적인 사람은 사는 것이고, 비관적인 사람은 팔면 된다. 여러 증거를 분석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면 될 뿐, 대세 하락이든 상승이든 소리 높여 주장하면서 불안을 조장하는 것도 삼가는 게 좋다.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래 한국 대학생 논문 공모전

주최: 기획재정부 · KDI 후원: 한국미래학회 · 세계미래포럼 · SBS

당신의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논문주제

- ▶ 20~3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유주제
예시) 성장과 복지, 그린이코노미, 미래산업, 다문화사회, 컨버전스사회,
융복합기술, 스마트기술, 인구구조 변화, 국제공조 체제, 남북통일 등

참가대상

- ▶ 2010년 9월 현재 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대학원 재학생
- ▶ 응모는 3인까지 공동참여 가능(3인 모두 참가 기준 충족 시)

공모전 일정

- ▶ 접수기간: 2010년 8월 1일 ~ 2010년 9월 17일
- ▶ 결과발표: 2010년 10월(추후 공지)

시상내역

상명	편수	시상내역
대상	1편	기획재정부 장관상,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1편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상, 상금 300만원
우수상	3편	한국미래학회 회장상, 상금 각 200만원
장려상	5편	세계미래포럼 이사장상, 상금 각 100만원

문의처

- ▶ E-mail: mirae@kdi.re.kr ▶ Tel: 02-958-4675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miraekorea.org) 참조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당신의 미소로
한국을 선물하세요”

SMILE KOREA